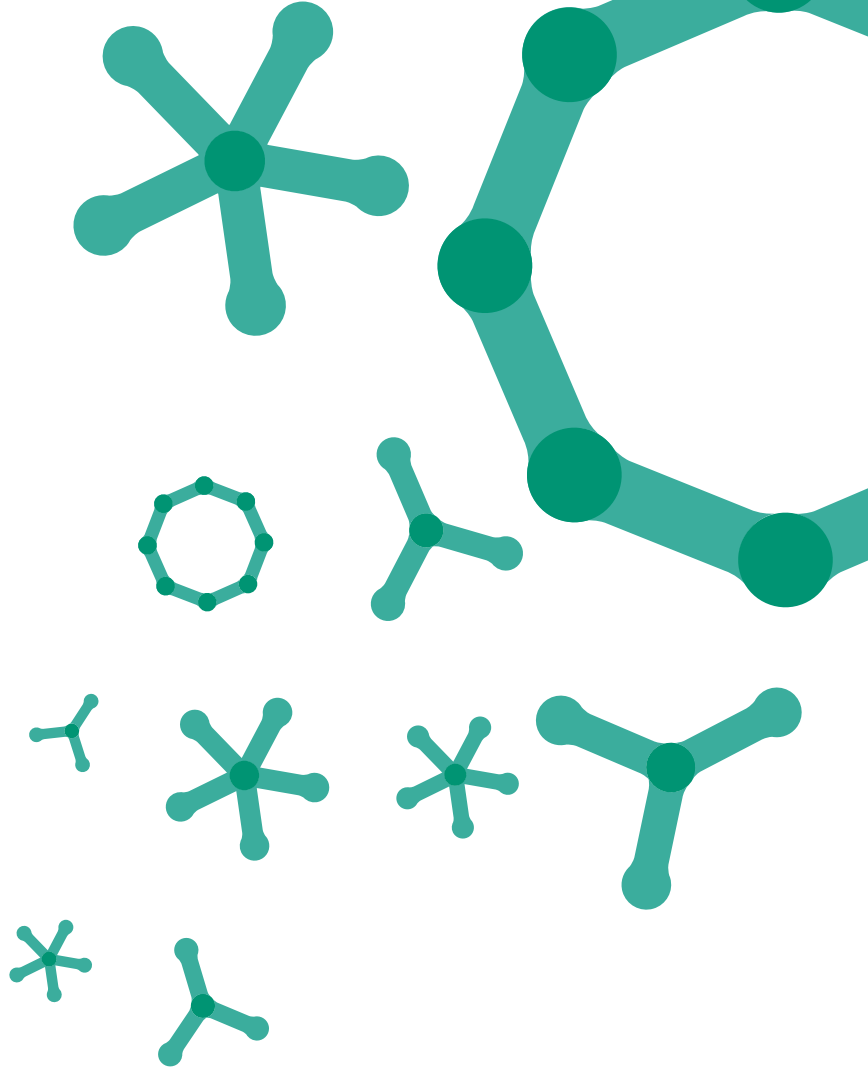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3호



---

# 기회균등지수연구

2015.09.



**동그라미재단**  
○ L  
The Circle Foundation

동그라미재단 기회균등지수연구

# 한국의 기회균등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진단

연구책임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kwon@korea.ac.kr)
공동연구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nomadwj@gmail.com)
공동연구	은민수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ems1230@hanmail.net)
공동연구	최종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choipd11@gmail.com)
연구보조	양서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smyang623@gmail.com)

---



# [연구 요약문]

## I. 연구 목적 및 세부 연구 주제

○ 본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과 분배정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그리고 지표와 인식 간 차이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통해 1)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다층적으로 진단해보고, 2) 한국의 기회균등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회균등 정도와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3)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의 네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함. 1) 기회균등의 이론틀 2)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 3)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4)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 II. 기회균등의 이론틀

### 1. 분배 정의에 관한 철학적 논의

○ 공리주의(utilitarianism) :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Bentham, 2005).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인 후생주의는 어떤 상태의 좋고 나쁨은 그 상태와 관련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 즉 효용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는 입장.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은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중시하지만 효용은 측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수궁할 수 공정성(fairness)이 고려되지 않음.

○ 존 롤스(Rawls)의 정의론 : 순수한 가정상태인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서 도달한 원리가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공리주의의 후생 대신 기초재를, 집계적 효용의 극대화 대신 최소극대화원리(maximin principle)를 대상으로 설정. 제 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부의 불평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원칙이 필요. 즉, 차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그 사회의 최대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정당화(차등의 원칙). 또한 사회적 지위, 부의 획득 수단 등 불평등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될 때 비로소 정당화됨 (기회균등의 원칙).

○ 드워킨(Dworkin)의 기회균등론 : 드워킨에 따르면 사람의 특성( 타고난 자질, 선호, 행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 요인(responsible factors)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임의적 요인(arbitrary factors)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것들로 구분.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재능(talent)이나 장애(handicap)은 당연히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마땅하며, 이 때 재능이나 장애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양의 재화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함. 롤스와 드워킨의 자원중심 접근의 장점은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심리적 만족도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제공되는 자원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임

□ 센(sen) : 센(Sen)은 사람마다 소유한 자원을 인생의 목표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주목하여 능력강화를 강조함. 센은 인간을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자원(소득, 장점 등)을 이용해서 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 혹은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인식함.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은 기능수행능력의 수준에 의해 크게 결정되므로 정의로운 분배 대상은 롤스의 기초재와 같은 재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의 집합인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y)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임. 센의 주장에서 한계는 첫째, 중증장애인과 같이 능력 개선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약간의 능력 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둘째,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능력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점임.

## 2.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 논의들

○ 과연 ‘무엇을 평등하게 나눌 것인가’ : 이 문제는 분배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자원’인가 ‘후생’인가, 혹은 ‘기회’인가 ‘결과’인가? 이러한 ‘평등의 측정단위’를 두고 오랫동안 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논쟁.

○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이상적인 분배로 인식하는 순수 자원균등주의(naive resources egalitarianism)의 한계는 첫째, 사람들마다 저마다 ‘필요’(needs)와 ‘선호’가 상이한데 어떻게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가라는 비판. 둘째, 센의 주장처럼 사람들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지적. 셋째, 개인의 책임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계속 흡연을 고집한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

○ 후생균등주의자들(welfare egalitarianism)은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자원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실제 느끼는 '후생'이며, 개인들 간의 '후생'을 균등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원배분이라고 주장. 후생균등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평등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러나 후생균등주의의 한계는 첫째, 개인의 무지와 오판에서 비롯된 선호와 취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사람들의 선호체계 자체가 환경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는 것. 셋째, '값비싼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등임.

○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 논의의 기여 :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자들 간 논의들은 기회균등의 공정성 원칙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들을 제공. 그것은 공정성 원칙을 확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과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

○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자원'이나 '후생'이나 라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아니라 결과의 불평등에 있어 어느 정도가 '개인 책임'이고 어느 부분이 '환경의 책임'인지를 구분하는 것. 즉 개인의 선택과 환경의 책임,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음.

### 3. 기회균등에 대한 이론화

○ 로머(Roemer)의 기회균등은 노력의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균등화시키는 것. 그의 기회균등 원칙은,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과, 다른 하나는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쟁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동등조건임.

○ 선진사회에서 정의(justice)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되는 개념은 바로 기회균등의 정의임. 그리고 기회균등 정책의 구체적인 방식은 경쟁조건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임. 경쟁조건이 균등화된 상태에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실행하고, 최종 성과가 개인 노력의 차이에 기인할 경우 성과의 차이는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

○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을 “개인의 노력(effort)에 의해 형성된 공과(desert)를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개념을 정의함.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공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유전요인, 장애 등의 환경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요소들이므로 제외하고, 개인적 노력여부와 정도만을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들’ 로 수용.

### III.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

○ 앞에서 살펴본 기회균등의 이론틀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고, 다른 나라와의 종적, 횡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분석하였음.

○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1)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이며, 2) 세대 간 계층이동성 혹은 임금 탄력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or elasticity)이고, 3) 교육 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를 설정하였음.

#### 1.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 전세계에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성취(achievement)에 대한 차이에 관심을 두게 됨.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인 기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둠.

○ 경제적 기회불평등을 측정하는 연구중 브루노리 외(Brunori et al. 2013)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기회 불평등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사전접근법을 통해 경제적 기회불평등(The Inequality of Economic Oppotunity; IEO) 지수를 계산함.

○ 이와 함께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조명한 페레이라 외(Ferreira et al. 2014)의 연구도 주목받음. 이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118개 가구조사와 134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메타데이터셋을 구성하여 42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세대 간 계층이동성/소득탄력성

○ 본 연구팀은 두 번째 지표로 세대 간 계층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을 탐색함.

○ 세대 간 계층이동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획득하는 지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함. 또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아버지의 소득이 1% 높아질 때, 자식의 기대소득은 몇 % 높아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임.

○ 계층이동성이 제한된 사회, 즉 소득탄력성이 큰 사회는 개인의 임금과 교육 그리고 직업이 그들의 부모와 강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사회임.

○ Corak(2006, 2013a 2013b)는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회귀식을 구성하고 22개국의 대상으로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계산함.

○ Corak의 연구에는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측정되지 않음. 이에 김희삼(2009, 2015), 김민성 외(2009), 최지은 외(2011)는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함. 그러나 한국의 실정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계산됨.

○ 양정승(2012)은 기존 연구들이 표본 선택과 하향편의 등이 내재하고 있어 임시소득의 분산과 항상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를 새롭게 계산하였고, 그 결과 0.37이라는 추정치를 얻음. 이를 적용하였을 때 한국은 중간 수준에 위치함.

### 3. 교육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기대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의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불평등의 정도는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오래전부터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음.

○ Ferreira and Gignoux(2011)는 시험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기초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측정함. OECD PISA(OECD Programme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점수의 표준편차를 교육성취로 보고, 사전 접근법을 통해 교육의 기회불평등(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EO)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 2012년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 집단의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이였으며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함.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높은 교육 성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의 하나는 높은 성취도 집단과 낮은 성취도 집단 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IV.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 1. 기회균등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 국제비교는 ISSP가 2009년 실시한 Social inequality IV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기회균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39개국 국민들의 인식과 비교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 크다(Q1)’에 대한 동의 응답률을 비교한결과 한국의 90.2%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음

○ ‘부유한 가족 출신이 중요하다(Q2-A)’에 대한 동의 응답률에서는 여기서 중국(85.7%)과 한국(80.8%)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 응답률을 보인 국가였음.

○ ‘부모의 높은 학력이 중요하다(Q2-B)’에 대한 동의 응답률에서는 이 문항에서는 한국(77.4%)과 중국(95.1%) 그리고 일본(61.2%)의 인식이 아주 다르게 나타남.

○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현재 사회적 계층 인식(Q3), 성장기 사회적 계층 인식(Q4), 아버지와 본인의 직업지위 비교(Q5) a문항임.

○ Q3(현재 사회적 계층인식)에서 한국인이 하위 5분위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8%여서 40개국 중 9위에 위치함. Q4(성장기 사회적 계층 인식)는 76.0%로 대만, 칠레, 사이프러스에 이어 네 번째의 순위.

○ Q5(아버지 직업과 본인의 직업지위 비교)에서 일본은 응답자 중 53%가 아버지의 지위보다 자신의 직업의 지위가 낮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임. 한국은 29%를 차지하여 칠레, 터키, 이스라엘과 2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Q6-A(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 기회가 많음), Q6-B(부자들만이 대학교육비용 부담), Q6-C(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대학교육의 동등한 기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Q6의 A 문항의 경우 한국은 52.8%의 시민이 좋은 중고교 출신만이 대학교육기회가 많다고 응답함, 이는 터키(60.8%), 중국(55.0%)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음. B 문항의 경우 한국국민의 57.2%가 부자들만이 대학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Q6의 C 문항에서는 한국 국민의 57.4%가 ‘성별, 인종 혹은 사회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2.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 1990년부터 매 5년마다 4차에 걸쳐 진행된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와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지난 25년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편, 2015년 동그라미 재단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중 5개의 문항(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보장,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선택해 연령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취업형태별로 분석하였음.

○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 연령층에서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음. △ 반면, 20대 연령층에서 한국사회가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았음. △ 한편, 40대와 50대에서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교육수준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 응답함.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고, 부모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하게 한국사회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소득하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득중층(중산층)부터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률이 높아짐.

○ 취업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개인의 노력이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또한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도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다른 집단들보다 한국사회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들보다 낮음. △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IV.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 이 절에서는 한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함.

○ **경제적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세대간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측정된 객관적 지표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었음

○ 왜 한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큰가를 추론해보면, 한국 사회가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비동시적인 경험들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것임(비동시성의 동시성,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temporary).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불평등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사회의 중추인 베이비 부머(baby boomer) 세대는 빠른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면서 계층상승을 경험한 세대이지만 동시에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순차적으로 경험했던 세대임. 이들이 자신들의 과거 성공 경험에 비추어 자식들에게 가지는 기대에 비해서 현재의 기회구조는 매우 불평등한 현실일 것임.

○ 한편 이들의 자식세대인 에코세대는 누구보다도 불평등한 기회구조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왔던 노령세대 또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세대임.

○ 이러한 기회균등 구조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다른 세대의 경험이 비추어, 자신 세대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악화된 현재의 기회 균등 구조를 실제보다 훨씬 불평등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음 △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와 구조화된 불평등 △ 제도적 요인과 시민들의 신뢰수준 △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등이 영향을 주고 있음.

○ 첫째, 노동 시장이 열악할수록 (자신의) 노동을 통한 사회적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은 객관적인 지표(세대 간 소득 탄력성)가 나타내는 것보다 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세대 간 소득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임.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면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 하지만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과 관련제도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큼

○ 셋째, 한국의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를 들 수 있음. 평등주의가 강할 경우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의 성공을 그들의 업적의 결과로 인정하기 보다는 연줄이나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폄하할 가능성이 큼. 평등주의가 강할 경우 한 사회의 기회 균등의 구조를 실제보다 훨씬 불평등하게 느낄 가능성이 큼

○ **교육의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한국은 중등학교의 수준이 대학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주관적 인식과 교육적 성취로 측정된 객관적 지표와의 차이가 가장 큰 두 나라 중의 한 나라임 또한 경제적 지위와 대학교육 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와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 분석됨,

○ 한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간의 차이가 큰 이유를 추론해보면, 우선 높은 교육적 열망에 대비되는 교육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됨.

○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고,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임. 졸업정원제 이후 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늘었고, 대학설립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의 수가 증가한 덕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대학들은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음. 대학의 서열화는 단지 신입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도 관련이 깊음.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이중화된 노동시장구조와 악화된 임금 불평 속에서 대학 졸업자의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과거에 비해서 대폭 약화됨. 대졸자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는 상위 10% 대학 졸업자에서만 나타나고 있음. 더 불어 하위 20%의 대학졸업자의 경우 성별과 경력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고졸자의 평균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 구조 또한 양극화 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확은 과거에 비해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 높은 대학 등록금 △ 높은 대학 등록금 상승률 △ 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 지원 △ 사교육 과열과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 △ 교육적 성취에 대비되는 취업률등을 들 수 있음.

## VI. 정책적 함의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는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구조의 객관적 위치에 비해서 (부정적인) 주관적 인식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사실임. 특히 한국 사회의 기회 균등 구조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음. 특히 한국 사회의 균등 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대에서 가장 높았음 (72.2%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이러한 지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첫째, 교육에 대한 공적지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대학의 완전 무상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한국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는 나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중등교육의 수준이 대학 교육 이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임.

○ 이러한 발견의 함의는 한국인들이 낮은 보상(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서열화된 대학 구조속에서 보다 높은 순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나친 과열경쟁과 필요이상의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임.

○ 서열화된 교육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서열을 평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공동학위제와 같은 제도를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교양대학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동그라미 재단에서 수행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성취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중요하다는 인식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40대(73.5%)와 50대였음.

○ 이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 한국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70-80년대 한국사회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이 세대는 조기퇴직, 퇴직 후 준비가 안된 노후 등 열악한 조건속에서 이혼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음.

○ 베이비 붐 세대가 성공에 개인의 노력보다는 가정 배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는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삶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연령 집단인 3~40대, 나아가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1992)에 전승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 일자리 공유, 부분별한 해고 억제,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자식세대인 에코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더불어 또한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격차와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처방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목차]

I. 연구 목적 및 세부 연구 주제 .....	1
II. 기회균등의 이론틀 .....	2
1. 분배정의에 관한 철학적 논의 .....	2
2.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 논의들 .....	6
3. 기회균등에 관한 이론화 .....	7
III.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 .....	9
1.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	9
2. 세대 간 계층이동성/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or income elasticity) .....	10
3. 교육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13
IV.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	15
1. 기회균등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	15
2.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	26
V.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	49
1. 긍정/부정 답변 비율로 본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	49
2.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	51
3.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	60
VI. 정책적 함의 .....	72
VII. 참고문헌 .....	76





# 1. 연구 목적 및 세부 연구 주제

본 연구는 한국의 불평등과 분배정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그리고 지표와 인식 간 차이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통해 1)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정도를 다층적으로 진단해보고, 2) 한국의 기회균등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회균등 정도와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3)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회(불)균등 문제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의 네 가지 세부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기회균등의 이론틀:** 기회균등과 분배정의 측면에서 기회균등의 이론적, 철학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기회균등의 개념(concept)을 구체화하여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2)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탐색하였다.(1) 경제적 기회균등 지표(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index), (2) 세대 간 계층이동성 지표(intergenerational mobility index), (3) 교육 기회의 균등 지표(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3)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본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9년 사회불평등 IV(social inequality IV) 조사와 동그라미 재단의 기회불평등 인식조사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정도를 다층적으로 진단해보았다. 이는 객관적 지표 못지않게 시민이 기회 균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현실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4)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세대 간 계층이동성 지표와 교육 기회의 균등의 지표를 추출하고, 주관적 인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이 다른 나라들보다 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초래되는지, 이러한 결과는 향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이 한국사회에 초래하는 다층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밝힐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회균등, 사회적 및 정치적 신뢰, 정부역량,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기회균등의 이론들

### 1. 분배 정의에 관한 철학적 논의

평등이란 개념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분배정의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벤담의 유명한 경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여야 한다는 말이다(Bentham, 2005). 벤담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J.S. Mill과 F. Edgeworth를 거쳐 현대의 J. Smart나 R. Hare로 이어지는 공리주의 철학은 법질서, 정치제도 혹은 사회제도의 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자면 후생경제학이란 분야는 그 기본성격이 공리주의 철학의 경제학적 적용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이준구, 1994).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인 후생주의는 어떤 상태의 좋고 나쁨은 그 상태와 관련된 개인들의 주관적 만족도, 즉 효용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복’이란 쾌락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욕구의 충족을 의미하는가? ‘행복감’과 ‘후생’을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할 것인가? 그리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분배상태’란 물질적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골고루 나누어진 상태일까 아니면 소수의 수중에 독점된 상태일까? 등의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Rawls, 1971).

그럼에도 공리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평등한 분배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벤담은 “모든 사람이 한 몫으로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한 몫 이상으로 썬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는 국왕, 귀족, 승려 그리고 평민은 물론 거지와 도둑까지도 모두 똑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평등주의적인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매우 불균등한 분배의 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벤담 류의 단순한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효용의 합을 사회적 후생의 수준으로 보고 이를 극대화시켜 주는 분배의 상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리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갖는 실용성과 현실적 호소력 때문일 것이다. 분배정책의 기본지침의 평등성이나 개인의 권리 혹은 자유 같은 추상적 구호에서 찾느니보다는 사회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에서 찾는 쪽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어느 개인의 권리가 약간 침해된다고 해서 꼭 반대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부유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하여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개인 권리의 침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실보다

득이 많을 경우 정부는 얼마든지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은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총계주의(aggregationism)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배원칙은 단순한 총계개념이 아니라 공정성(fairness)일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의 차원에서 존 롤스(Rawls, 1971)는 벤담 등의 후생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평등주의관을 제시한다. 그는 자연상태와 유사한 가상의인 ‘원초적 입장’을 상정한 다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협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원리가 자기에 유리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순수한 가정상태로서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인 원초적 입장에서 도달한 원리에 대한 합의는 공정하며 정의롭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이성적인 논의 조건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질서이다. 그리고 유명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지의 장막’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닌 가치관념(conception of the good)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되기에는 너무 다양하여 비교하기 어렵지만, 필수적인 사회적 기초재(social primary goods)의 양을 지수화한다면 그것은 비교 가능하다며 ‘자원주의’를 주장하였다.

롤스는 공리주의의 후생 대신 기초재를, 집계적 효용의 극대화 대신 최소극대화 원리(maximin principle)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는데,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며,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인간의 존엄성, 신체, 사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를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는 정치사회적으로 계산이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1의 원칙은 부의 불평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원칙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능력과 권리에 따른 차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그 사회의 최대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정당화된다(차등의 원칙). 또한 사회적 지위, 부의 획득 수단 등 불평등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기회균등의 원칙). 여기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사회경제적 이득에 의해 배제될 수 없고 차등에 앞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롤스가 전망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분배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또한 롤스는 천부적 재능과 그 산물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파악하였다. 천부적 재능을 보유했느냐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한 운(luck)의 문제이므로 이것이 개인들의 삶의 처지를 좌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awls 1971).

드워킨(Dworkin)도 롤스와 같이 후생이 아닌 자원(resource)이 평등한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등이 정치공동체의 최고의 덕목이라 간주하면서 분배적 평등을 강조한다. 드워킨은 분배적 평등을 자원과 복지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복지의 평등은 정부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지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분배하는 결과적 평등인데 비해, 자원의 평등은 구성원이 갖는 자원의 몫이 가능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적 혹은 과정적 평등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자원의 평등을 통해 복지의 평등을 비판하는데 핵심적 요지는 복지의 평등은 복지의 차이가 선호와 기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육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선호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들의 자원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자신의 선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그러한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진정한 평등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드워킨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Dworkin 1981a, 1981b).

보다 구체적으로 드워킨에 따르면 사람의 특성(타고난 자질, 선호, 행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 요인(responsible factors)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임의적 요인(arbitrary factors)으로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것들이다. 퇴머가 인정하듯 드워킨의 ‘책임성’과 ‘임의성’ 개념이야말로 기회균등을 정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아닐 수 없다(Dworkin 1981a, 1981b; Roemer 2002:455-456). ‘책임성’과 ‘임의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재능(talent)이나 장애(handicap)은 당연히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마땅하며, 이 때 재능이나 장애도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같은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양의 재화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Dworkin 1981a, b). 다만 드워킨의 자원분배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불충분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쨌든 롤스와 드워킨의 자원중심 접근의 장점은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심리적 만족도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제공되는 자원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기초재의 양을 공정한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롤스와 드워킨의 정의론을 센(Sen)은 개인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물질주의라고 비판한다. 센은 롤스의 정의론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시도하는데 그 핵심 개념은 능력(capability)이다. 센은 사람마다 소유한 자원을 인생의 목

표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자원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자원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what goods can do for people)를 고려하여 자원을 본인의 복지를 위해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en 1984). 센은 인간을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치판단과 행위동기의 다양성,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자원(소득, 장점 등)을 이용해서 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 혹은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의 차이(다양성)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었음에도 불평등한 소득을 초래하거나 균등하게 소득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균등한 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센의 입장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 능력평등의 공간이다. 능력이론의 기본적 개념은 성취수단, 기능(functioning),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취수단은 목표성취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를 띤다. 기능은 개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원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적절한 영양의 공급, 자존심의 성취, 사회일원으로서의 생활 영위 등이며 이러한 기능집합으로 구성된 것이 복지(well-being)이다. 역량은 개인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기능집합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결국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은 기능수행능력의 수준에 의해 크게 결정되므로 정의로운 분배 대상은 롤스의 기초재와 같은 재화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의 집합인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y)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Sen 1982, 1987).

이와 같은 센의 주장은 물질(자원)이 제공하는 사용가치에 대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반작용하는가’와는 무관하게 물질의 기능 그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상인은 음식을 먹고 다리에 적절한 근력을 기르면 되지만 장애인은 다른 재화(휠체어)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기능(자유로운 이동)이란 자원(음식 혹은 휠체어)과 효용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en 1984, 1992). 센의 능력이론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넘어 개인이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센의 주장 역시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 중증장애인과 같이 능력 개선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약간의 능력 증진을 위하여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둘째,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자원이 능력으로 전환되는 데는 개인의 의지와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능력달성이라는 목표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비판 이후 40년

간 분배철학의 역사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박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Cohen, 1989; Dworkin, 1981 a,b).

## 2.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 논의들

과연 ‘무엇을 평등하게 나눌 것인가’ 의 문제는 분배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자원’ 인가 ‘후생’ 인가, 혹은 ‘기회’ 인가 ‘결과’ 인가? 이러한 ‘평등의 측정단위’ (the currency of equality)를 두고 오랫동안 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여왔다. 19세기 평등주의적 철학자들은 대체로 토지나 화폐와 같은 양도가 가능한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이상적인 분배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수 자원균등주의(naive resources egalitarianism)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사람들마다 저마다 ‘필요’ (needs)와 ‘선호’ 가 상이한데 어떻게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가라는 비판이다. 따라서 일정한 자원 동일하게 정상인과 장애인에 배분하는 식의 단순 자원평등적 분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둘째, 셴의 주장처럼 사람들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능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조건에서 아무리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책임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계속 흡연을 고집한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동일한 의료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이다(이우진 2012).

이러한 순수 자원균등주의에 대한 비판은 후생균등주의자들(welfare egalitarianism)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자원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실제 느끼는 ‘후생’이며, 개인들 간의 ‘후생’을 균등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원배분이라고 주장한다. 후생균등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평등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생균등주의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개인의 무지와 오관에서 비롯된 선호와 취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이 ‘중독적 선호’ (addictive preference)로서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잦은 성형수술 등은 소비하는 사람의 만족(후생)을 증대시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담배, 술, 성형수술에 중독된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비판이다. 둘째, 사람들의 선호체계 자체가 환경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는 것이 ‘값싼 취향’ (cheap taste)으로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은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에도 크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값싼 취향을 근거로 적은 혜택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여우처럼 자신의 선호를 주어진 환경에 맞춰 변형시키거나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엘스터는 이를 선호 형성의 적응성(adaptive preference formation)이라 지칭했다. 셋째, 단순 자원균등주의와 마찬가지로 후생균등주의 역시 개인의 책임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명품 백, 비싼 와인, 캐비어 등의 값비싼 선호(expensive taste)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균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후생수준과 동일한 후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적할 수 있다. 드워킨에 따르면 값비싼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가 그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원을 제공하면 소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제공된 자원을 활용하여 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은 순전히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신정완 2014; Dworkin 2005: 114-128).

지금까지 검토한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자들 간 논의들은 기회균등의 공정성 원칙을 정립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공정성 원칙을 확립함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과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즉 ‘결과’를 후생으로 측정할 것인가, ‘자원’으로 측정할 것인가 라는 논의와 상관없이 그 결과의 불평등에 있어 어느 정도가 ‘개인 책임’ 이고 어느 부분이 ‘환경의 책임’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이우진, 2012; Roemer, 2002:455-456). 따라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장애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 요인에 의한 불운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분배가 아니지만, 독특한 취향이나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코 불공정한 분배가 아니다. 결국 자원균등주의자와 후생균등주의자들 간 논쟁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사실 ‘자원’ 이냐 ‘후생’ 이냐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환경,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양자 간 논쟁은 이론적 논의의 중심을 ‘기회의 균등’ 으로 이동시키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전제하는 기회균등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기회균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 3. 기회균등에 대한 이론화

자원균등주의와 후생균등주의의 논쟁은 기회균등의 이론화를 시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표적인 학자는 로머(Roemer 1998)와 코헨(Cohen 1989) 그리고 루카스(Lucas 1995)등이다. 특히 로머(Roemer 1998)는 기회균등을 목표달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목표(objectives)는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가치의 기대(expected present value of lifetime income)이며, 개인들의 목표달성은 크게 환경, 노력, 정책이라는 3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개인들의 성과는 결국 환경, 노력, 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은 개인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따라서 그 책임



도 물을 수 없는 사회적, 유전적, 생물학적 조건들이다. 노력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들의 총합으로서 환경과 함께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가치를 결정한다. 정책은 환경의 차이로 인한 개인들 간 사회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퇴머의 기회균등(equal-opportunity)은 노력의 차이가 아닌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균등화시키는 것이다(Roemer 1998, 2002: 455-456; Roemer et al. 2003: 540-542).

퇴머에 따르면 기회 균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원칙으로, 사회적 지위를 향한 경쟁에서 해당 지위가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level the playing field)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쟁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첫번째 원칙만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보상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루카스(Lucas 1995)는 기회균등이란 개념에는 두 개의 중요한 의미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개인이 가진 자질(merit)과 행동에 의한 공과(desert)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루카스에 따르면 첫 번째 기회균등은 일이나 직무 할당에 있어 개인의 자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자질주의(meritocracy) 입장이고, 두 번째 기회균등은 행동의 공과(노력 정도)에 기반하여 적절한 보상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개인이 보여주는 현재화된 능력에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질 덕분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요소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결과의 평등이란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자원(또는 후생)의 크기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Lucas 1995; 이우진 2012).

선진사회에서 정의(justice)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지지되는 개념은 바로 기회균등의 정의일 것이다. 그리고 기회균등정책의 구체적인 방식은 경쟁조건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경쟁조건이 균등화된 상태에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최선의 노력을 실행하고, 최종 성과가 개인 노력의 차이에 기인할 경우 성과의 차이는 윤리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을 “개인의 노력(effort)에 의해 형성된 공과(desert)를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공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 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유전요인, 장애 등의 환경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요소들이므로 제외하고, 개인적 노력여부와 정도만을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소들’로 수용한다.

### Ⅲ.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

본 연구진은 앞서 살펴본 기회균등의 이론틀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하고, 다른 나라와의 종적, 횡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진은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이며, 둘째는 세대 간 계층이동성 혹은 임금 탄력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or elasticity)이고, 셋째는 교육 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이다.

#### 1.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성취(achievement)에 대한 차이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소득불평등과 함께 기회균등에 대한 논의 역시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활발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인 기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Checchi and Peragine 2010; Ferreira and Gignoux 2011; Fleurbaey and Peragine 2009).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결과(outcomes)를 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노력(efforts)과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환경(circumstances)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하고 있다(Roemer, 1998). 이 중 환경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져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들이기 때문에 기회균등 이론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불공정(unfair)하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경제적 기회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연구는 브루노리 외(Brunori et al. 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기회불평등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사전접근법을 통해 경제적 기회불평등(The In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IEO) 지수를 계산하였다. 특히 경제적 기회불평등 지수를 수준지수(IEO-L)와 비율지수(IEO-R)로 구분하고, 41개국을 조사한 국가 간 데이터에서 얻어진 메타 데이터셋(meta dataset)을 통해 횡적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수와 1인당 생산, 소득불평등(Gini coefficient), 세대 간 계층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회의 불평등을 사전접근법을 통해 측정한 기존연구 8개의 데이터를 종합해 가구당 소득차이 등 경제적 결과변수에 대해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성(gender), 인종, 종족(ethnicity), 국적, 도시/농촌 거주여부, 출생지 등의 환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사전접근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환경이 제시되면, 개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벡터에 의해 개인들이 속하는 유형(types)을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유한(finite)하고, 각각의 유형에 충분히 많은 수의 개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벡터들이 정의된다. 각 유형은 동일한 환경을 가진 그룹 혹은 집단(set)으로 구분된다. 사전접근은 개인의 환경적 요인이 경제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집단들의 경제적 성취의 분포에서 나타난 차이가 바로 기회의 불평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조명한 페레이라 외(Ferreira et al. 2014)의 연구 역시 주목받았다. 특히 이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118개 가구조사와 134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메타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개인의 경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인당 순가계소득(net household income per capita)과 일인당 가계지출(household expenditure per capita)을 사용하였고, 5년마다의 1인당 GNI 증가율 등 경제성장 관련 변수와 Gini 계수와 같은 불평등 지수와 관계성을 밝혔다. 이 같은 사전접근법을 통한 경제적 기회불평등 지표는 적어도 개인의 ‘경제적’ 결과에 개인의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환경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 2. 세대 간 계층이동성/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or income elasticity)

본 연구팀은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을 측정하는 두 번째 지표로 세대 간 계층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과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을 탐색하였다. 세대 간 계층이동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획득하는 지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OECD 2010; Corak 2006; 2013, Krueger 2012). 또한 세대 간 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은 아버지의 소득이 1% 높아질 때, 자식의 기대소득은 몇 % 높아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층이동성이 제한된 사회, 즉 소득탄력성이 큰 사회는 개인의 임금과 교육 그리고 직업이 그들의 부모와 강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사회이다. 최근 OECD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동성이 제한된 사회는 인간의 기술을 잘못 배분하거나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기회균등의 부재는 동기,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OECD 2010). <표 3-1>은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회귀식이다.

<표 3-1>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식

$$\ln Y_{k,i} = \alpha + \beta \ln Y_{p,i} + \gamma_m \sum_{m=1}^M Controls_{k,p,i} + \epsilon_{k,i}$$

$Y_{k,i}$  = 자녀 i의 경제적 성취(임금, 소득)  $Y_{p,i}$  = 자녀 i의 부모의 이전 시기의 경제적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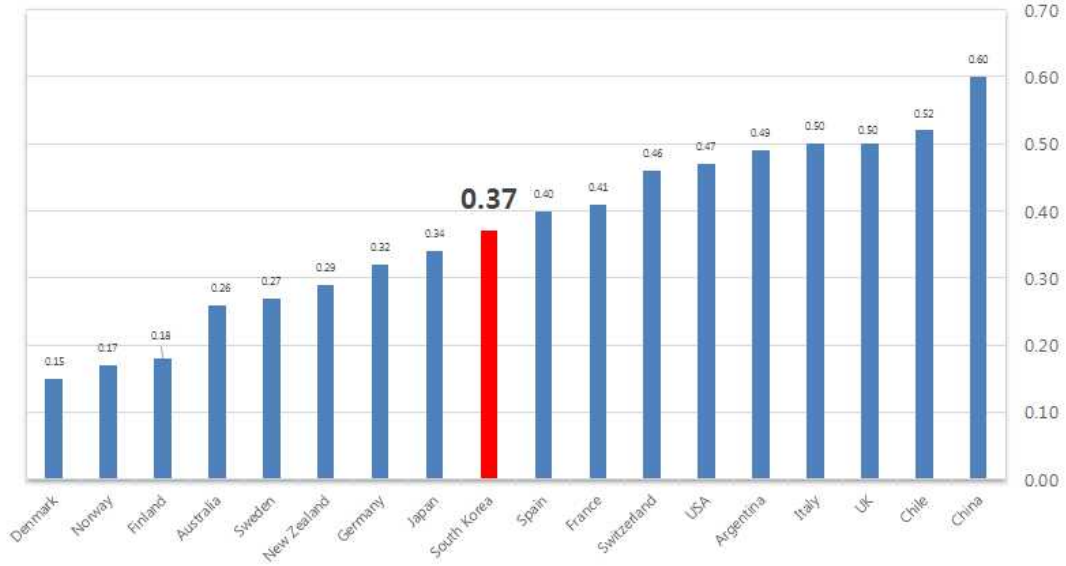
출처: Corak (2006, 2013a)

여기에서  $Y_{k,i}$ 는 자녀 i의 경제적 성취(임금, 소득) 변수,  $Y_{p,i}$ 는 자녀 i의 부모의 이전 시기의 경제적 성취 변수이다. 개인의 경제적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다. 회귀계수  $\beta$ 의 추정치가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해석은 부모의 경제적 성취가 한 단위 높은 것이 자녀의 경제적 성취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beta$  추정치의 값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성취가 자녀의 그것에 더 많은 효과를 갖는 것이고,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이며, 이는 세대간 계층이동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Corak(2006, 2013a, 2013b)은 서구 선진민주주의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와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아시아(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그림 <3-1> 참조). 그러나 Corak의 연구에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한국의 세대 간 이동성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세대 간 이동성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희삼(2009, 2015)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1998년)부터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통해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가 추정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은 0.195이다.<sup>1)</sup> 김민성 외(2009) 역시 KLIPS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였는데, 1998년 이후 5개년의 임금을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을 때 0.213으로 추정하였다. 최지은 외(2011)는 KLIPS 데이터 1차부터 11차까지 사용하였을 때 월평균 근로소득에 대하여 0.13의 추정치를 얻었다. 이 연구들이 측정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한국의 실정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Corak의 추정치와 비교하였을 때 북유럽 국가들인 덴마크(0.13), 노르웨이(0.18), 핀란드(0.1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양정승(2012)은 기존 연구들의 측정치가 표본 선택의 문제와 하향편의(attenuation bias)등이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임시소득의 분산과 항상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를 새롭게 계산하였다, 그 결과 0.37이라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은 Corak(2013b)과 양정승(2012)이 추정한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국제비교를 보여준다(18개국). 한국은 여기서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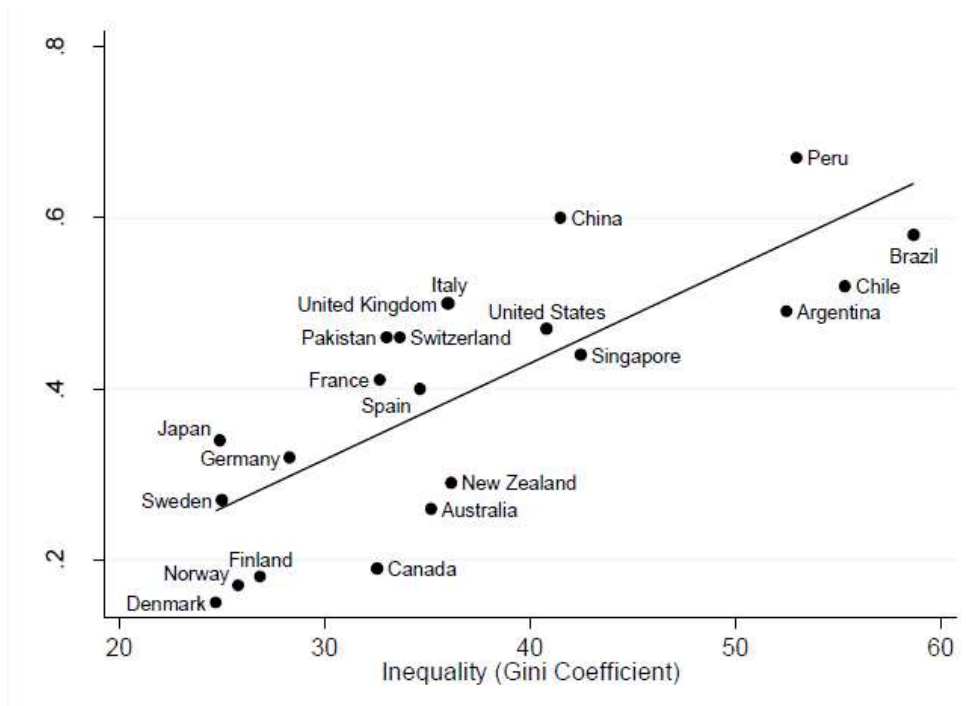
1) 김희삼(2009)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소득, 연간 가구소득, 순 가구자산을 경제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3-1>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국제비교



출처: Corak(2013b), 양정승(2012).

<그림 3-2> 위대한 개츠비 곡선: 소득불평등(GINI)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



출처: Corak(2013b).

세대 간 이동성과 빈부격차와의 관계는 '위대한 개츠비' 커브(great Gatsby curve)라고 정의된다(Corak 2006, 2013a, 2013b). 위대한 개츠비 커브는 횡축에 불평등을 나타내는 Gini 계수와, 종축에 세대간 탄력성지수를 놓았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림 3-2>가 보여주듯이,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상관관계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득불평등이 낮은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소득불평등이 높은 나라들에서 계층이동성의 정도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세대 간 수입탄력성)이 높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회경제적인 세대 간 계층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V장에서 양정승(2012)이 추정한 한국의 세대간 한국의 세대간 소득탄력성 추정치를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판단하고 이를 한국의 주관적 인식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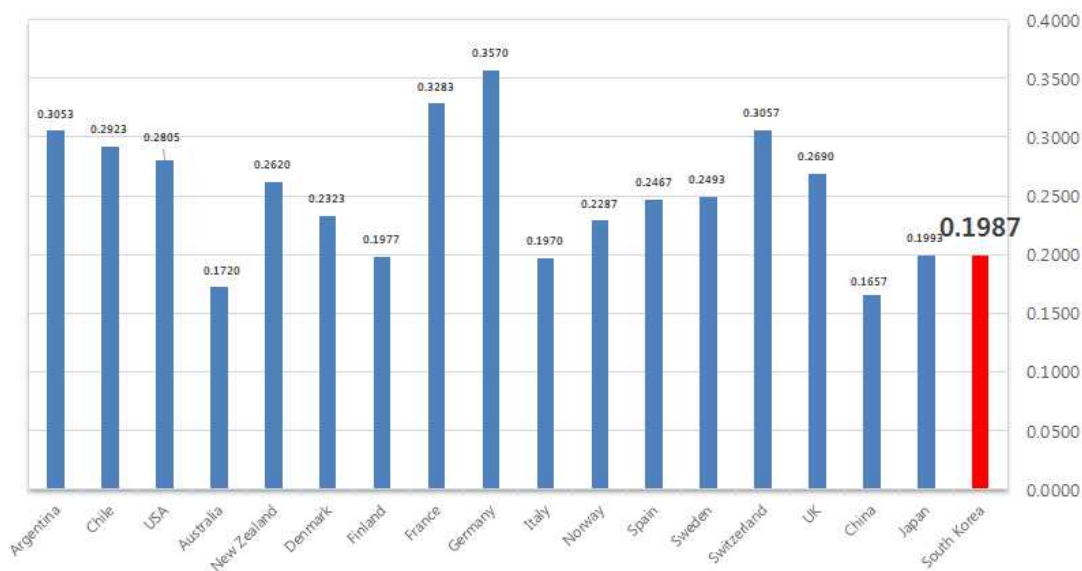
### 3. 교육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교육은 소득의 강력한 예측변수(predictor)라고 할 수 있다(Ferreira and Gignoux 2011).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기대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식의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의 정도는 기회균등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 모두에게 오래전부터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성취(achievement)는 최소한 개인의 기능과 능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투입(input)으로 간주되기도 하였고(Sen 1984), 교육의 성취와 소득불평등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으며(Blau and Kahn 2005; Bedard and Ferrall 2003), 나아가 교육성취가 건강불평등과 정치참여의 불평등 등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공정성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교육의 공정한 분배, 즉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분배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공정한 교육기회에 대한 관심은 어떤 가족 배경과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각 개인의 교육의 결과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Ferreira and Gignoux(2011)는 시험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기초한 교육기회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교육불평등과 관련되는 교육성취(educational achievement)와 교육 기회(educational opportunity)의 불평등을 측정하였는데, 측정방식은 2006년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PISA(OECD Programme of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점수의 표준편차를 교육성취로 보고, 사전 접근법을 통해 교육의 기회불평등(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Eo)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교육기회 불평등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언어, 이민자 지위, 가정 내 책에 대한 접근성, 문화아이템, 학교

의 위치 등이다. 이를 통해 두 측정치는 57개국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의 사례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 성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림 3-3>은 18개국의 PISA 시험점수 표준편차의 그래프이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객관적 지표 (PISA 시험점수의 표준편차)



출처: OECD(2012b).

표준편차의 비교만 가지고는 정확한 한국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포착하기 어렵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조사에서 시험점수의 성취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들의 성취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 집단의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이었으며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비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높은 교육 성취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중의 하나는 높은 성취도 집단과 낮은 성취도 집단 간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OECD 2012).

## IV.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이 절에서는 객관적 지표 탐색에 더하여 미시적 수준에서 주관적인 인식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거시적 지표가 나타내는 기회균등의 수준과 국민들이 “인식하는”(perceived) 기회균등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다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기회 균등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 기회균등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 1) 경제적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앞서 서술했듯이 본 연구가 중심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은 첫째는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이며, 둘째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 혹은 소득탄력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or elasticity)이고, 셋째는 교육 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이다. 우선 ISSP의 데이터(1999년과 2009년)에 기반을 두어 기회균등의 세 가지 중심 영역에 대한 개인적 수준의 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다양한 국가(39개국) 국민들의 인식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아쉽게도 1999년 조사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종단적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례의 분석에 대한 준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ISSP 2009년 조사에서 경제적 기회의 균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표 3-1>의 문항들에 근거하여 측정될 수 있다.

<표 4-1>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ISSP 2009)

문항구분	문항내용	조사년도
경제적 기회균등 Q1	Q1.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A. Differences in income in <country> are too large.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 크다.  1) Strongly agree(매우 동의) 2) Agree (동의) 3) Neither agree nor disagree(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음) 4) Disagree(반대) 5) Strongly Disagree (매우 반대) 6) Can' t Choose	ISSP 2009
경제적	Q2.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to show	I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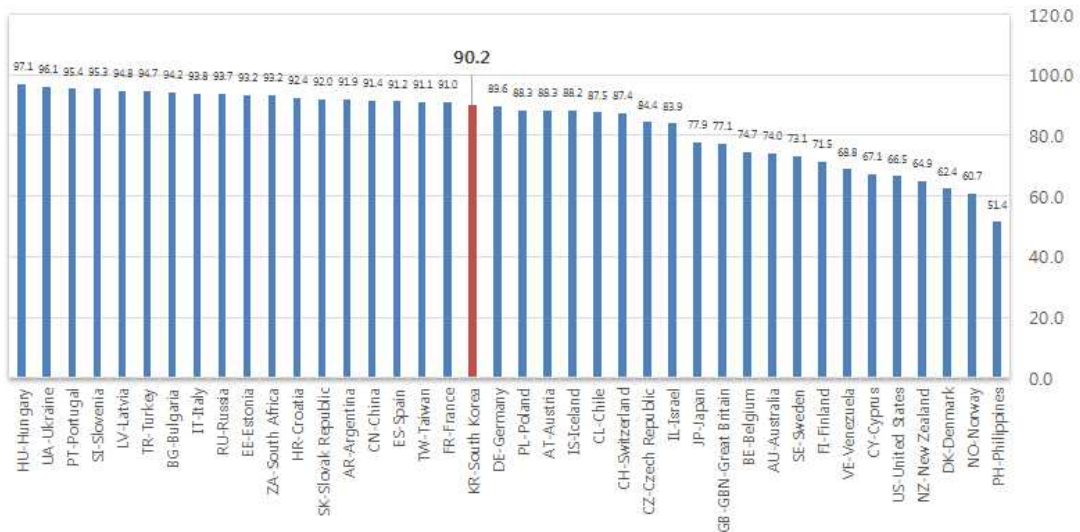


<p>기회의 불평등 Q2.</p>	<p>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p> <p>삶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p> <p>A. ...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부유한 가족 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p> <p>B. ... how important is having well-educated parents? 부모의 높은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p> <p>1) Essential(핵심적) 2) Very Important (매우 중요) 3) Fairly Important(중요) 4) Not Very 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음) 5) Not Important at all (전혀 중요하지 않음) 6) Can't Choose</p>	<p>2009</p>
--------------------	----------------------------------------------------------------------------------------------------------------------------------------------------------------------------------------------------------------------------------------------------------------------------------------------------------------------------------------------------------------------------------------------------------------------------------------------------	-------------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1>은 문항 Q1의 국제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문항 Q1의 경우 한국의 90.2%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60%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어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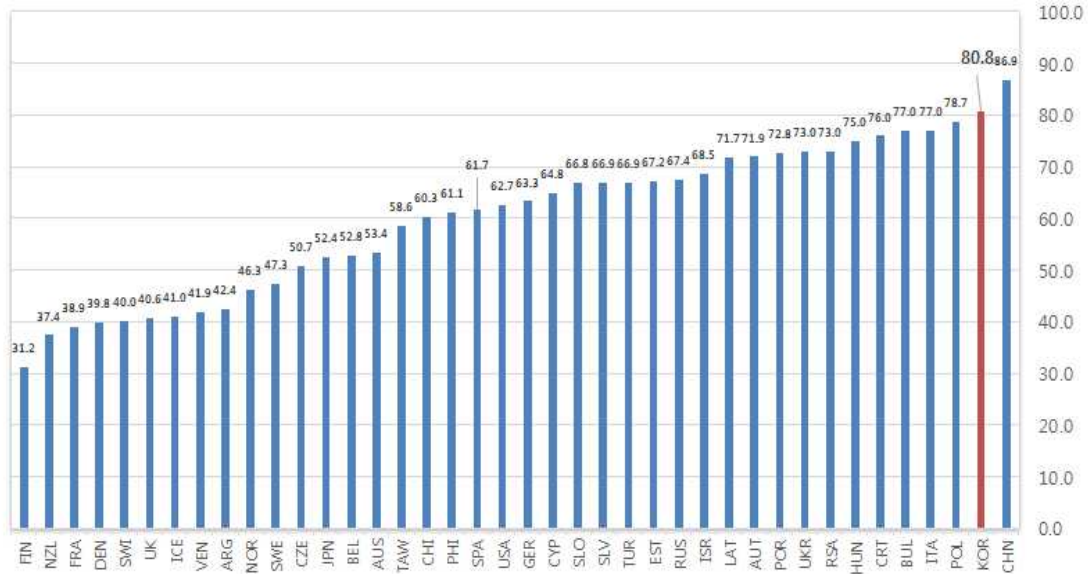
<그림 4-1>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너무 크다’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비교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2>는 ‘부유한 가족 출신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응답률의 국제비교를 보여준다(Q2 A문항). 여기서 중국(85.7%)과 한국(80.8%)은 열 명 중 여덟 명이상이 인생에 성공하는데 있어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응답률을 보인 국가군이었다.

<그림 4-2> ‘부유한 가족 출신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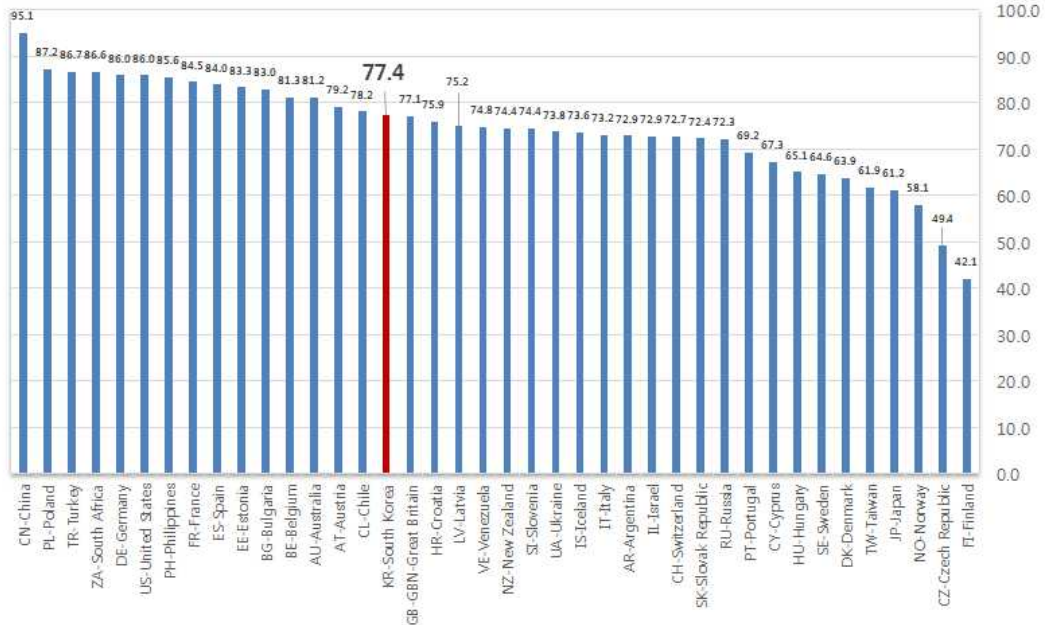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이에 반해 미국(60.7%), 일본(52.4%)등은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스위스(38.0%), 프랑스(36.1%), 핀란드(31.0%) 등 유럽 국가들의 시민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과 인생의 성공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4-3>은 ‘부모의 높은 학력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응답률의 국제비교를 보여준다(Q2-B문항). 이 문항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인식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77.4%가 이에 동의해서 중간정도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무려 95.1%가 부모의 높은 학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61.2%가 부모의 높은 학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여 낮은 수준의 국가군으로 묶여 있었다.

<그림 4-3> '부모의 높은 학력이 중요하다'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 비교



2) 세대 간 계층이동성/소득탄력성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ISSP 중 표 <4-2>의 문항들에 근거하여 측정될 수 있다.

<표 4-2>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구분	문항내용	조사년도
세대간 계층이동성	<p>Q3. In our society there are groups which tend to be towards the top and groups which tend to be towards the bottom. Below is a scale that runs from top to bottom. Where would you put yourself now on this scale? 한 사회는 최하층에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최상층에 속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까지 비율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Q4. And if you think about the family that you grew up in, where did they fit in then? (Please tick one box) 성장기의 당신의 가족은 1-10까지 비율 중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ISSP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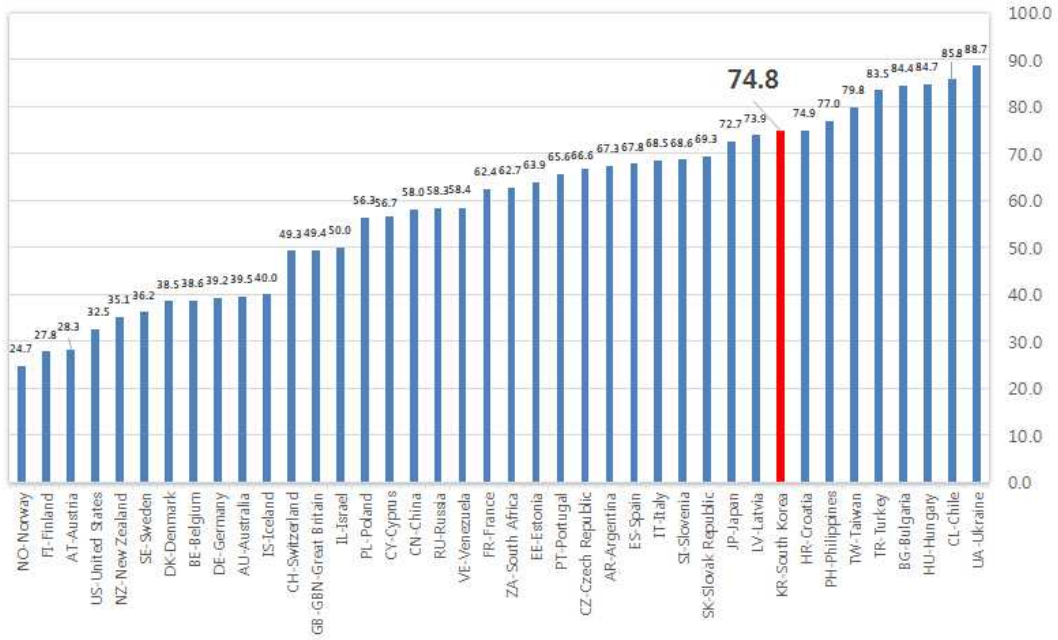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세대간 계층이동성</p>	<p>Q5. Please think about your present job (or your last one if you don't have one now). If you compare this job to the job your father had when you were &lt;14/15/16&gt;, would you say that the level of status of your job is (or was)...</p> <p>“현재의 직업(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최근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직업을 당신의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수준이 당신의 아버지의 직업 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Much higher than your father's 아버지보다 매우 높다  2) Higher 아버지보다 높다  3) About equal 비슷하다  4) Lower 아버지보다 낮다  5) Much lower than your father's 아버지보다 매우 낮다  6) I never had a job/I don't know what my father did/ father never had a job/never knew father/father deceased</p>	<p style="text-align: center;">ISSP 2009</p>
--------------------------------------------------	----------------------------------------------------------------------------------------------------------------------------------------------------------------------------------------------------------------------------------------------------------------------------------------------------------------------------------------------------------------------------------------------------------------------------------------------------------------------------------------------------------------------------------------------------------------------------------------------------------------------------------------------------------------------------------------------	--------------------------------------------------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위 두 문항의 비교는 응답자가 느끼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준다. <그림 4-4>와 <그림 4-5>는 Q3과 Q4에서 하위 5분위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현재 하위 5분위에 속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4.8%였으며, 성장기에 하위 5분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76.0%로 과거에 하위계층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현재 상황의 주관적인 사회적 계층 인식은 40개국 중 9위였으며, 성장기의 사회적 계층이 낮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만, 칠레, 사이프러스에 이어 네 번째의 순위였다. <그림 4-6>은 현재와 성장기의 주관적 사회적 계층 인식의 비교표이다. 불가리아, 헝가리는 성장기의 사회적 계층보다 현재의 사회적 계층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기의 사회적 계층보다 현재의 사회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비율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sup>2)</sup> 한편 <그림 4-7>은 한국의 현재와 성장기의 사회적 계층의 분포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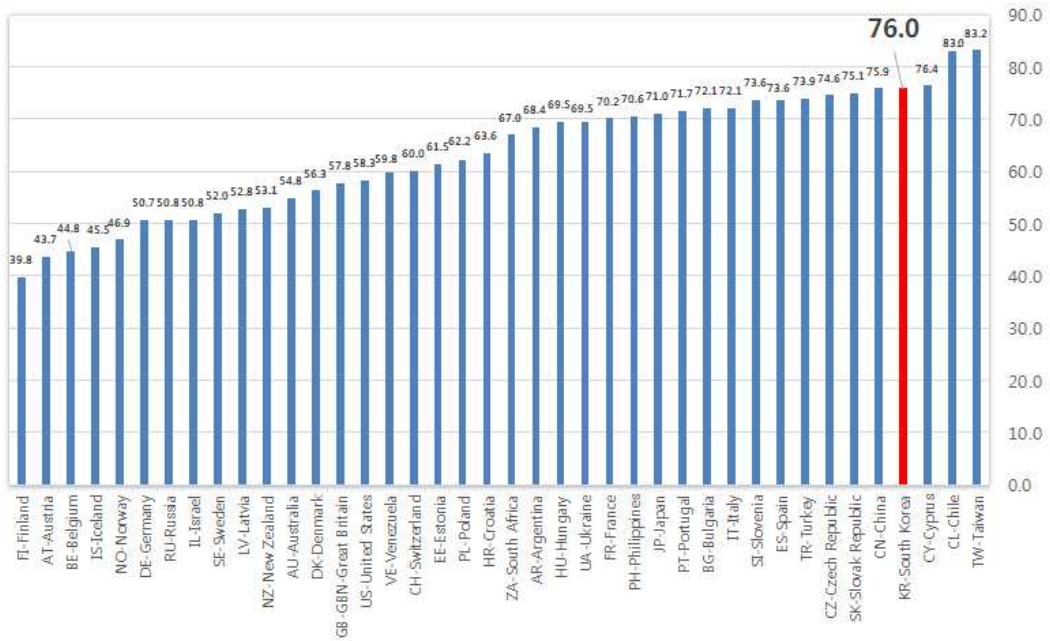
2)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지만,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서 과거의 사회적 계층이 훨씬 더 좋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현재의 사회적 계층 인식에 대한 국제비교(하위 5분위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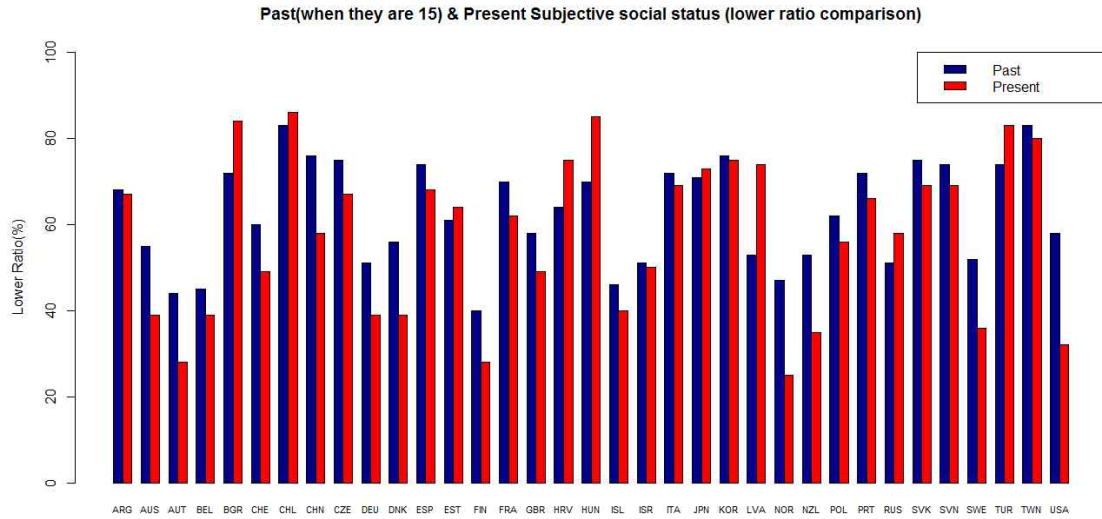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5> 성장기 사회적 계층 인식에 대한 국제비교(하위 5분위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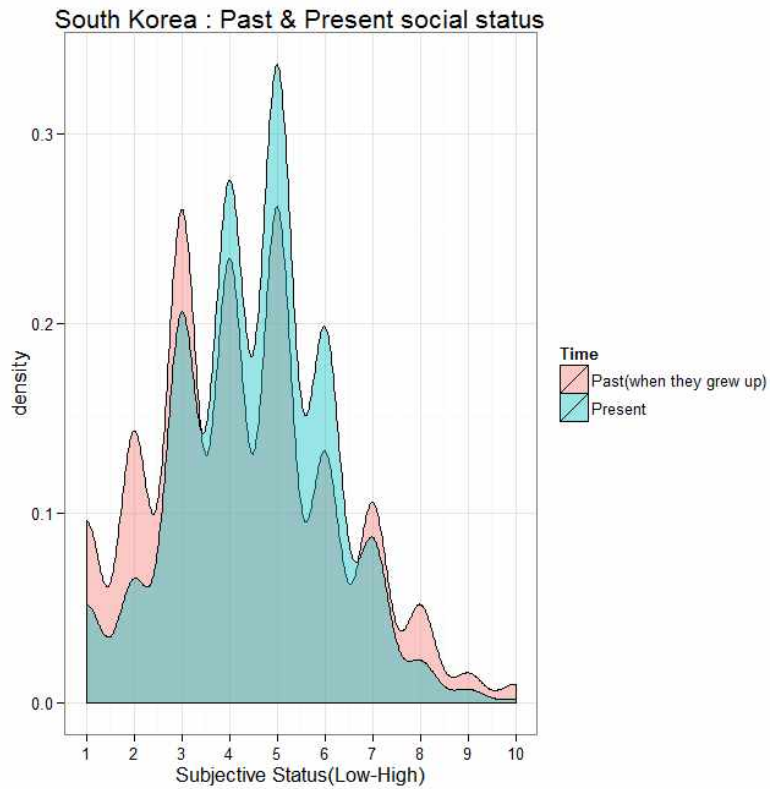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6> 성장기와 현재의 사회적 계층의 국제비교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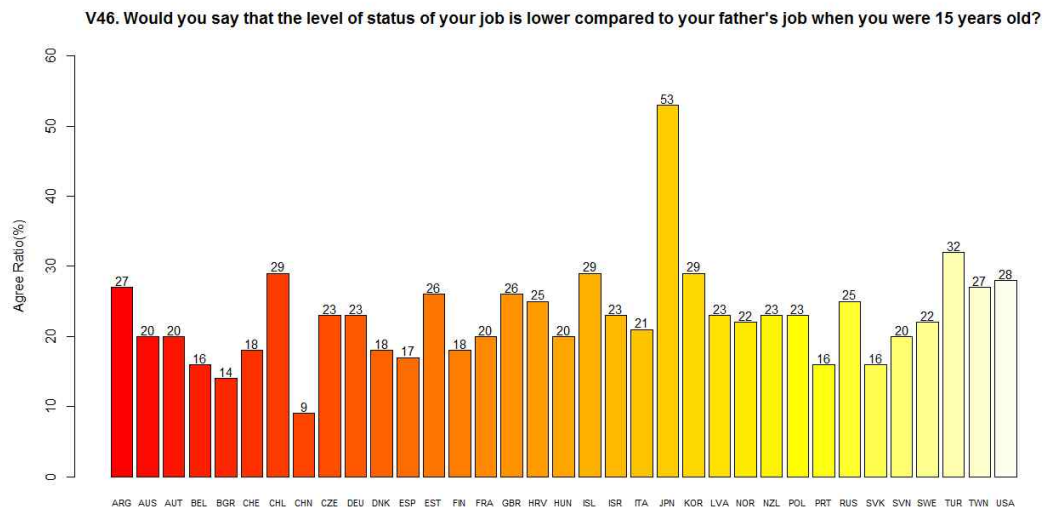
<그림 4-7> 성장기와 현재의 사회적 계층 분포: 한국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8>은 아버지 직업과 본인의 현재 직업의 지위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지위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의 국제비교를 보여주고 있다(Q5). 일본은 응답자 중 53%가 아버지의 지위보다 자신의 직업의 지위가 낮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29%를 차지하여 칠레, 터키, 이스라엘과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현재의 사회적 계층을 더 낮게 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아버지 직업과 본인의 현재 직업의 지위차이에 대한 국제비교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 3) 교육 기회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이 절에서는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다.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표4-3>의 문항에 근거하여 측정될 수 있다.

<표 4-3>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구분	문항내용	조사년도
교육 기회의 불평등	<p>Q6.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p> <p>A. In &lt;country&gt; only students from the best secondary schools have a good chance to obtain a university education. 좋은 중·고교출신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p> <p>B. In &lt;country&gt;, only the rich can afford the costs of attending university. 단지 부자들만이 대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p> <p>C. In &lt;country&gt; people have the same chances to enter university, regardless of their gender, ethnicity or social background. 사람들은 성별이나, 인종 혹은 사회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대학에 들어 갈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p> <p>1) Strongly agree(매우 동의)                  2) Agree (동의)                  3) Neither agree nor disagree(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음)                  4) Disagree(반대)                  5) Strongly Disagree (매우 반대)                  6) Can' t Choose</p>	ISSP 2009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Q6의 A 문항의 경우 한국은 52.8%의 시민이 좋은 중고교 출신만이 대학교육기회가 많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터키(60.8%), 중국(55.0%) 다음으로 높은 순위였다. 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10% 내외의 시민들이 이 같이 응답하고 있어 대조적이다(<그림 4-9>) 또한 Q6의 B 문항의 경우 한국국민의 57.2%가 부자들만이 대학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크라이나(65.8%), 러시아(61.8%), 라트비아(58.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4-10>). 따라서 주관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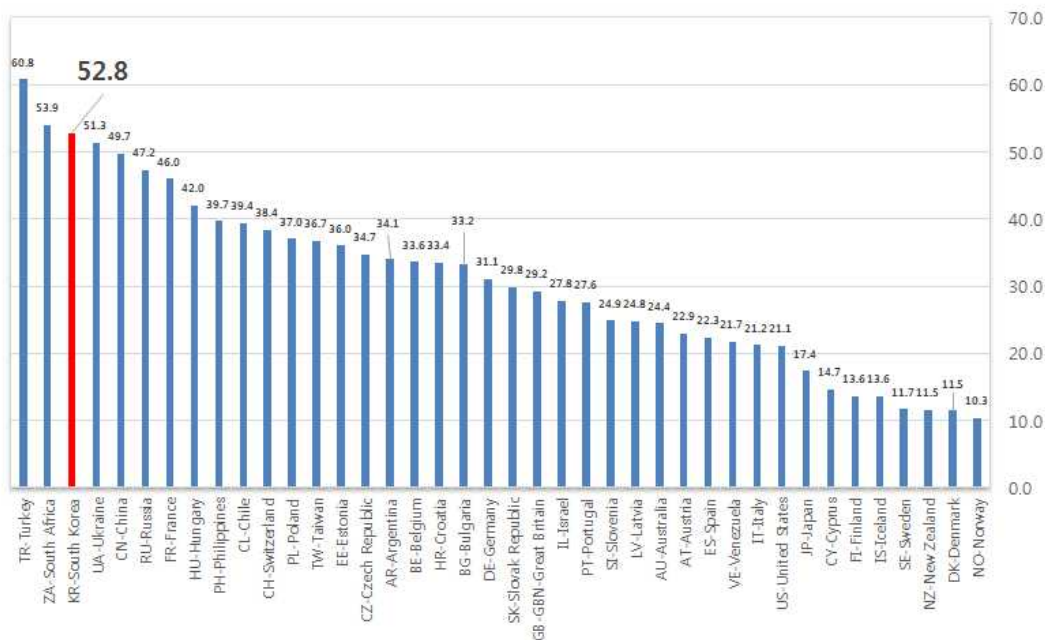


식으로 한국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의 수준을 가늠해 본다면 매우 심화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Q6의 C 문항에서는 한국 국민의 57.4%가 ‘성별, 인종 혹은 사회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가장 높은 비율인 대만은 85.9%의 국민이 기회가 동등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장 낮은 러시아의 경우 단지 40.6%만이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문항과 B 문항의 응답결과를 종합했을 때 일관적인 경향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람들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감당의 문제와 성별, 종족, 인종 등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의 문제는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입학은 비용의 문제이지 입학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성별과 사회적 배경,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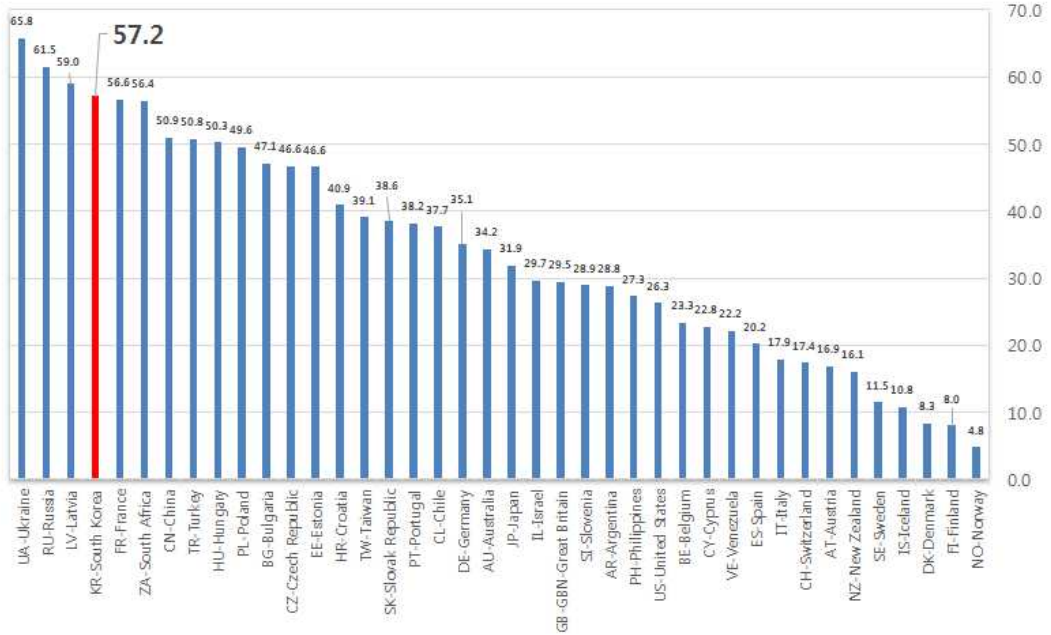
ISSP 2009년 조사의 문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 보다 경제 격차와 교육 격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 같은 불평등을 대체적으로 ISSP 2009년 조사의 몇몇 문항의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격차와 교육 격차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 같은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좋은 중고교 출신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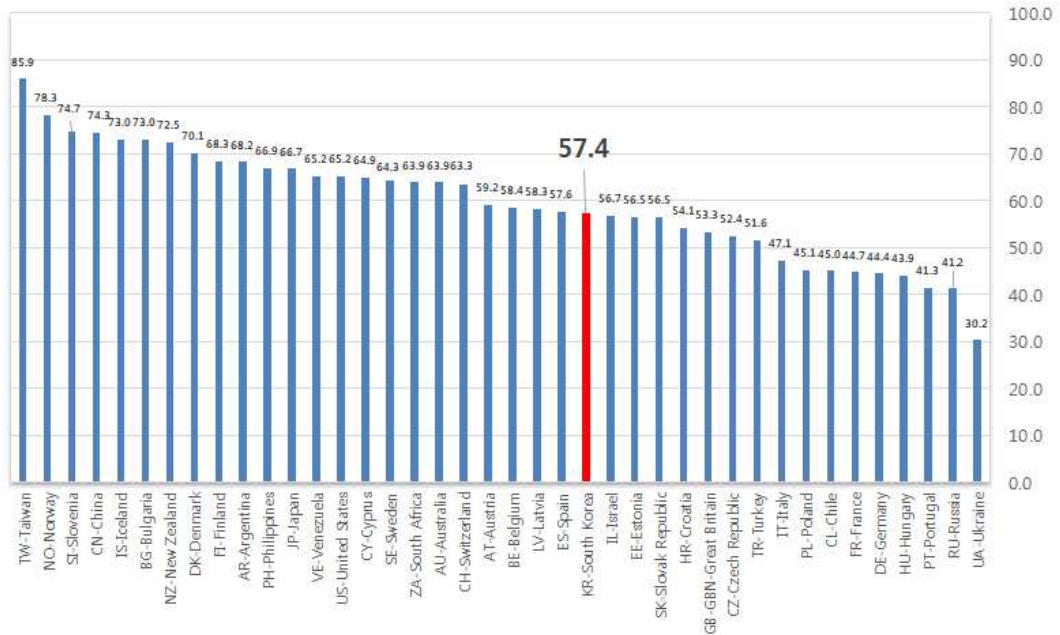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10> ‘부자만이 대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비교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그림 4-11> ‘인종, 종족 등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있다’에 대한 동의 응답의 국제비교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 2.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며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 논의한다. 이와 함께, 동그라미 재단이 2015년 4월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현재 우리사회의 기회 불평등 인식을 세대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취업형태별로 구분하여, 누가 더 기회불평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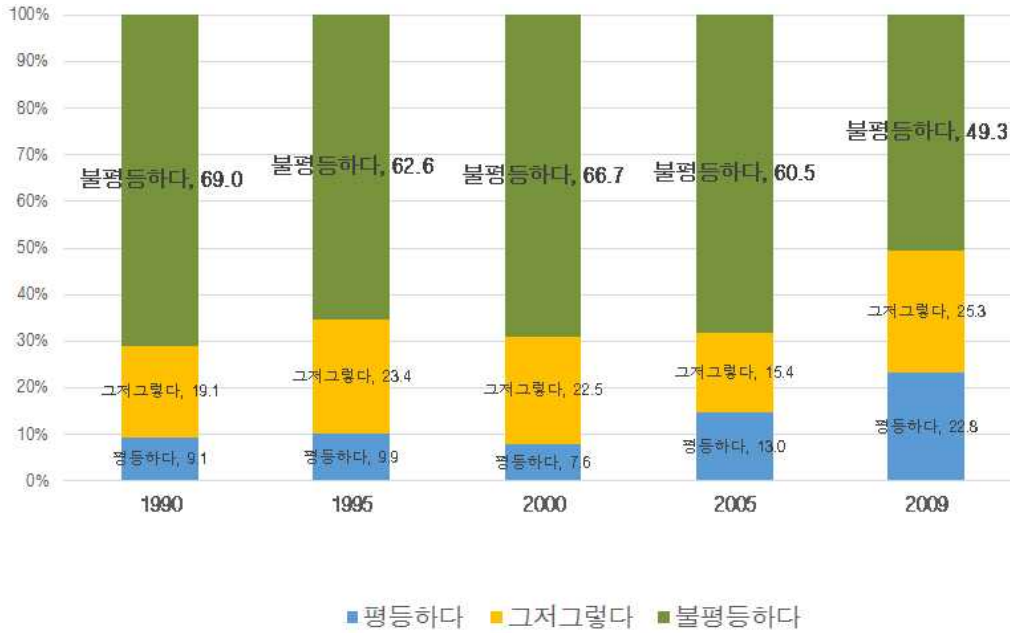
### 1)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의 변화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

우선 우리사회에서 기회균등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1990년부터 매 5년마다 4차에 걸쳐 진행된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와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들어가 있다. 특히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는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네 차례에 걸쳐 매 5년마다 수행된 조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인식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 1차부터 4차까지의 조사(1990,1995,2000,2005)와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동일하게 “우리사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교육기회 2)소득과 재산”이라는 문항이 들어가 있어 시계열적 변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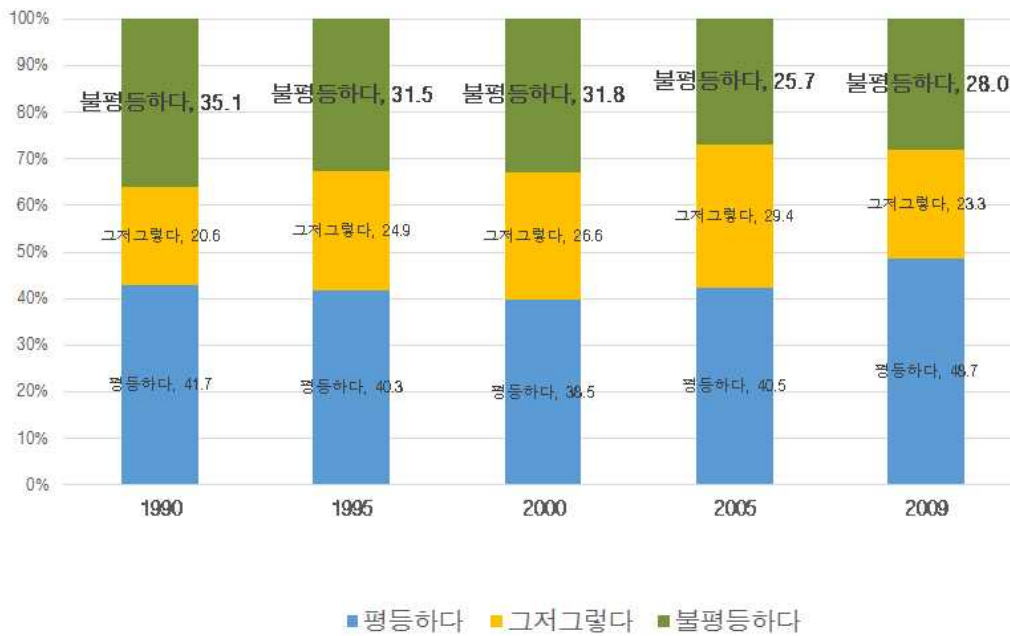
<그림 4-12>과 <그림 4-13>은 1990년 이후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과 교육기회 불평등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볼 때 지난 25년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소득과 재산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폭이지만 이 같은 인식은 20년의 시간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 기회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지난 20년간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30%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2>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변화



출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1990, 1995, 2000,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그림 4-13>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 변화



출처: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1990, 1995, 2000,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 2)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분석

2015년 동그라미 재단은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기회불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사는 2015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인식 △ 개인 성공의 중요조건 △ 한국 사회의 기회균등 수준 △ 개인 노력과 기회 불평등 수용 인식 △ 한국사회의 기회불평등 수준 △ 분야별 기회불평등 해소 필요도 등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형태, 지역별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4-4>는 이 조사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5 가지 문항을 보여준다.

<표 4-4>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문항

번호	문항	응답보기	문항요약
A1-4)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4) 한국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 .	① 매우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
A2-1)	우리사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개인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모의 경제 수준	① 매우 중요하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모 경제수준 중요도
A2-2)	우리사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개인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부모의 학력 수준	① 매우 중요하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모의 학력수준 중요도
A3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평하다 ~ ⑤ 전혀 공평하지 않다	한국사회 기회 보장
C1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에서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음 각각에 대한 기회가 얼마나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공교육, 사교육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⑦ 매우 그렇다	교육기회 의불평등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표 4-5>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의 조사결과

	긍정응답	중간	부정	비고
A1)-4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	65.7% (중요하다)	19.2%	15.1%	역문항
A2)-1 부모의 경제수준	84.3%	11.4%	4.3%	
A2)-2 부모의 학력수준	62.9%	25.8%	11.3%	
A3.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보장	9.8% (공평하다)	27.6%	62.6%	역문항
C1. 교육기회의 불평등	73.4% (차별적이다)	15.0%	11.6%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표 4-5>는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조사의 결과로만 보았을 때 한국국민들은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배경(A1)-4과 부모의 경제수준(A2)-1과 학력수준(A2)-2이 중요하며, 한국사회가 기회보장에 있어서 불공평한 수준(A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육기회의 불평등(C1)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객관적 지표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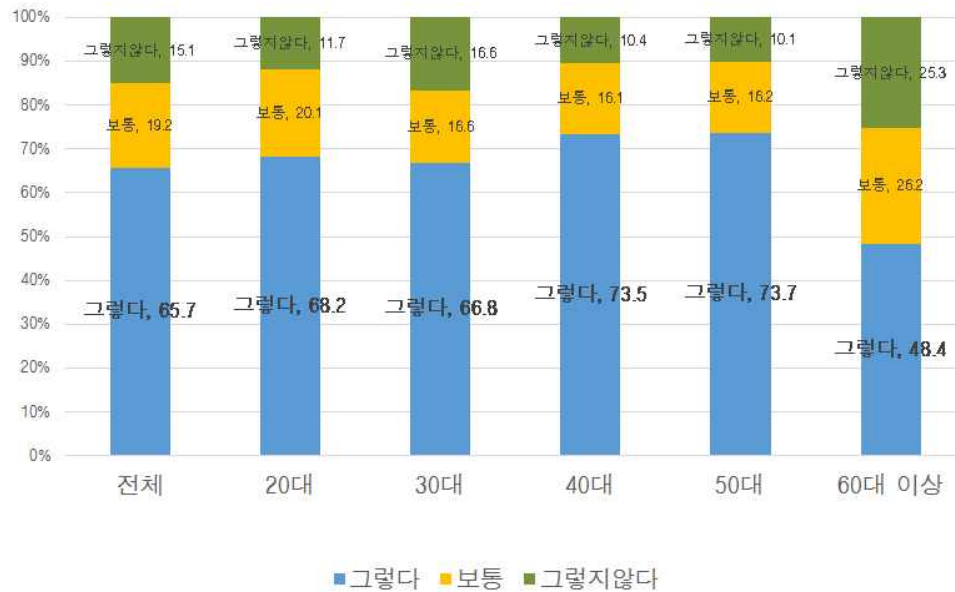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1)-4 문항에 대해 국민의 65.7%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비율은 단지 15.1%였다.

A2-1) 문항인 ‘부모의 경제수준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84.3%여서 국민 중 대다수가 부모의 경제수준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과 4.3%만이 부모의 경제수준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이룬다. A2-2) 문항인 부모의 학력수준의 중요도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62.9%였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수준 중요도의 긍정 응답률보다는 낮았다. 한국사회가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위한 기회보장 정도를 묻는 A3 문항에는 62.8%가 부정적으로 응답(공평하지 않다)하였다. 또한 C1 문항의 경우 73.4%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3)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응답분포

이 절에서는 <표 4-5>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문항의 연령별 응답분포를 분석한다. <그림 4-12>는 A1-4)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의 연령분포도를 보여 준다.

<그림 4-14>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두 전체평균(65.7%)을 상회한다 (pearson  $\chi^2$  =80.12, Pr=0.000).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았을 때, 다른 연령층보다 40대(73.5%)와 50대(73.7%)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40대는 1965년-1974년생, 50대는 1955년-64년생의 세대들이다. 특히 50대 연령층은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이 세대는 우리사회에서 전 세대를 통틀어 평균소득은 가장 높고 평균소비도 가장 높은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고용불안정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노동시장 유연성이 커지면서, 빈번한 취업과 이직 및 실직, 재취업을 겪은 세대이며, 현재는 조기은퇴의 위험을 겪고 있는 세대인 것이다(신광영 2012). 외환위기 이후의 삶이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60대 이상에서 개인의 성공에 사회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그들이 고도성장과 급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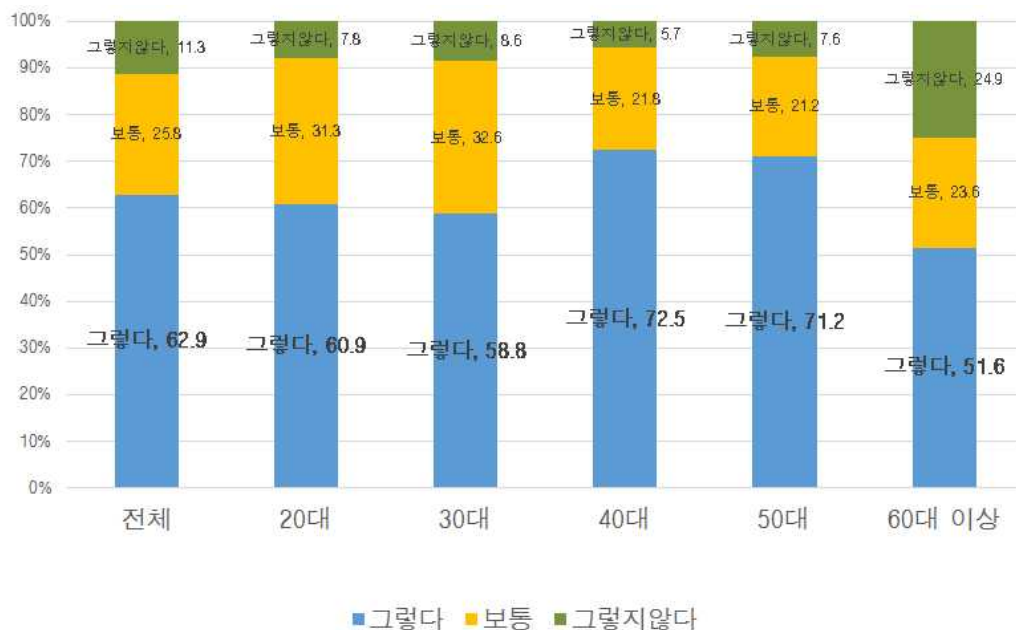
한 사회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아 본인의 노력 여부를 사회적 배경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15> 부모의 경제수준 중요도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16> 부모의 학력수준 중요도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15>와 <그림 4-16>은 부모의 경제수준(A2-1))과 학력수준(A2-2))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부모의 경제수준 pearson  $\chi^2=58.19$  Pr=0.000, 부모의 학력수준 pearson  $\chi^2=73.63$ , Pr=0.000).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도를 묻는 A1-4)문항과 비슷하게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 <그림 4-14>의 결과와 비슷하다.

우선 부모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이 40대와 50대에서 높게 나온 이유를 추론해보자. 이는 대학진학이나 해외유학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 1980년의 대학진학률은 27.2%, 지금의 40대(1965~74년생)가 대학을 진학하던 1990년에도 대학진학률은 33.2%에 불과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던 때인 1980년대 초반 무렵부터 해외유학의 붐도 시작되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해도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대학진학이나 해외유학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대학졸업과 해외유학 여부가 취업과 승진 등 본인의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재력이 얼마나 자녀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체험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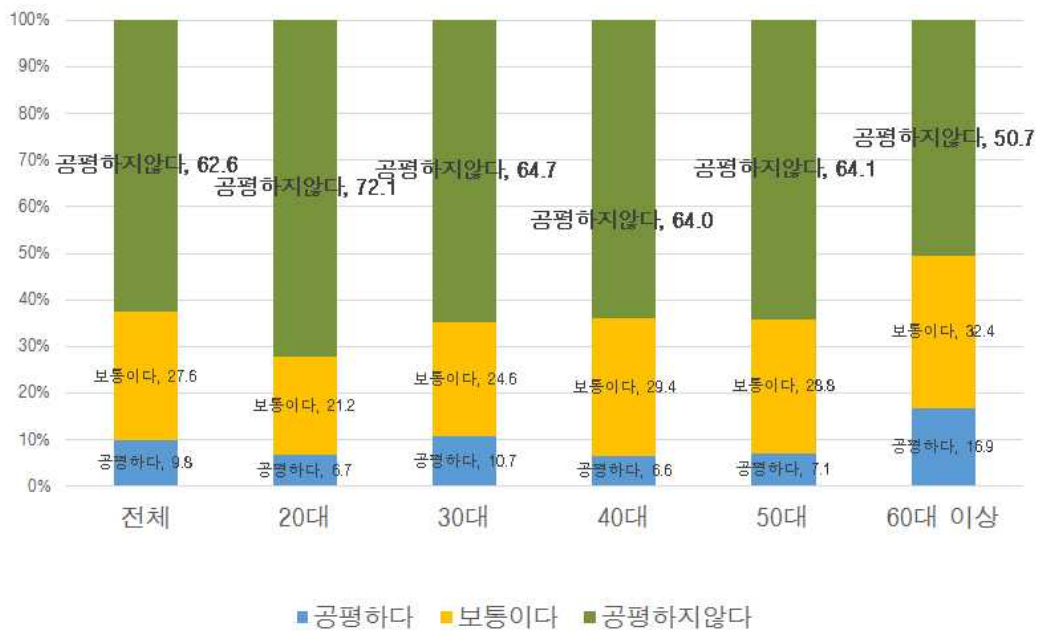
이에 반해 지금의 30대와 20대가 대학이나 유학을 결정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2000년 68%, 2008년 83.8%까지 상승하였다. 회소성이 적어진 대학학력은 이전 세대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 등 본인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40대와 50대에 비하여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학업중이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20, 30대의 경우 본인의 삶에 미치는 부모 경제력의 영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학력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도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2.5%와 71.2%로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60.9%와 58.8%가 부모의 학력을 본인 성공의 요인으로 지목하여 40대, 50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림 4-17>은 한국사회의 기회 보장을 묻는 문항(A3)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도를 보여준다(pearson  $\chi^2=39.53$  pr=0.001) 이 문항을 통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기회 균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공평하다(매우 공평하다+다소 공평하다)라는 (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9%이다. <그림 4-17>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20대 연령층에서 한국사회가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72.1%)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의 부모의 경제력 및 학력의 영향에 대한 응답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만 청

년세대가 얼마나 취업, 결혼, 출산, 승진 등에 불안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에서 보여주었던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대한 영향력을 40대, 50대에 비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소수의 선택이라는 조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운(luck)과 같은 환경에 의해 본인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인 것이다.

<그림 4-17> 한국사회의 기회 보장에 대한 연령별 응답 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18>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즉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공교육, 사교육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pearson  $\chi^2=76.14$  pr=0.000). 전체 응답자 중 공평하다 (매우 그렇다 + 상당히 그렇다 +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3.4% 였다. 여기서 연령별 20대 연령층과 60대 이상층에서는 각각 65.9%와 63.1%로 전체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40대는 84.4%가 교육기회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연령층도 80%에 육박한다. 40대와 50대에서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높은 수준의 공교육비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0대의 자녀는 대략 20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일 확률이 높아 등록금 부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고, 40대의 자녀는 대략 10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것이므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많이 느꼈을 것일 것이다. 최근 한 연구는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2014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

육비라고 응답한 40대 연령층 비율은 36.5%였으며, 50대 연령층에서는 33.6%로 응답하였고, 이는 전체 평균인 29.2%보다 높았다(현대경제연구원, 2015).

<그림 4-18>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연령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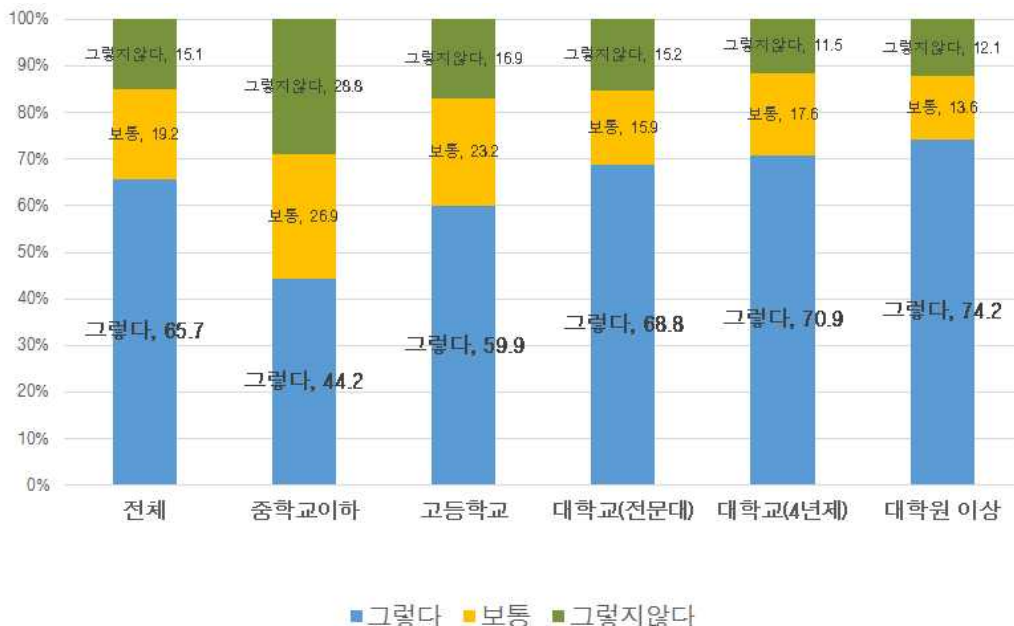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 4)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교육수준별 응답분포

이 절에서는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분석한다. <그림 4-19>은 A1-4)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분포도이다. 응답자 중 65.7%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중요하다 응답하였는데(pearson  $\chi^2=39.53$ ,  $pr=0.000$ ),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계층에서는 평균을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은 이른바 ‘학벌사회’ 라고 불리우며, 학벌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더불어 대학진학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1980년 대학진학률은 11.4%에 머물렀으나 1990년 23.6%, 수준에서 2000년 52.5%로 50%대를 넘었으며, 2014년에는 68.2%로 70%에 육박하였다(통계청 2015).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계층은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기회를 기대하거나 경험했을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전문대 졸업자는 68.8%,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70.9%,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74.2% 등 정확히 학력에 비례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은 교육에 특별히 소요된 비용이 적으므로 낮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어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덜 강조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이하에서는 각각 59.9%, 44.2%가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19>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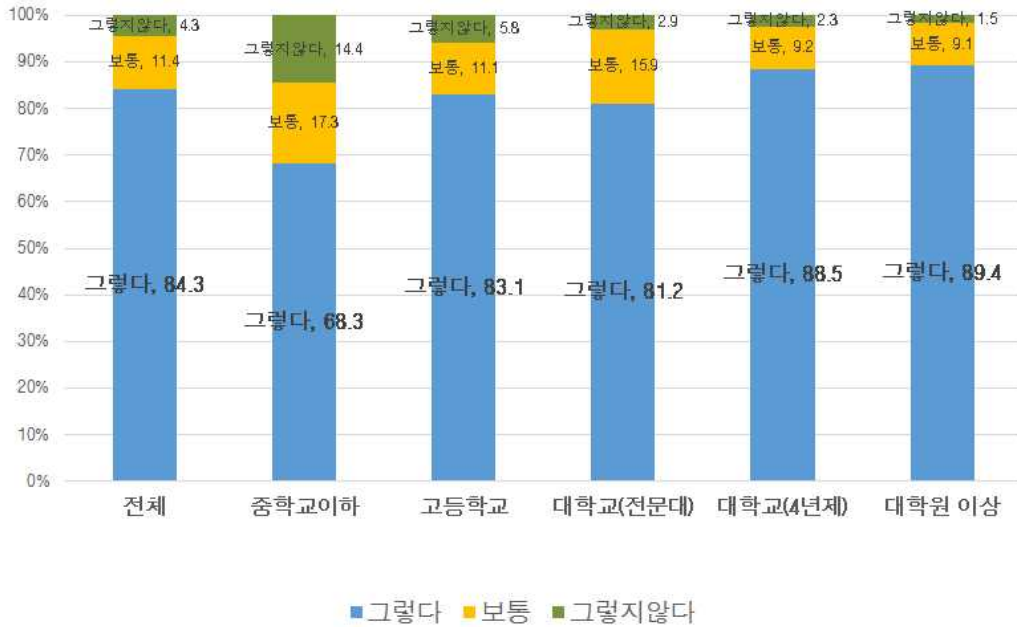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20>과 <그림 4-21>은 부모의 경제수준(A2-1))과 학력수준(A2-2))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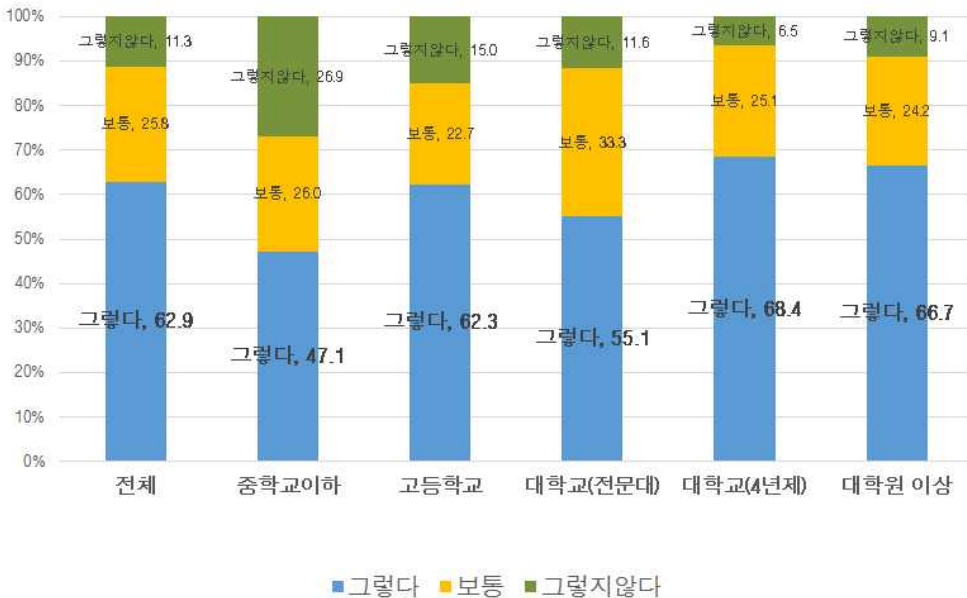
인의 성공에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학력수준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부모의 경제수준 pearson  $\chi^2=53.59$  Pr=0.000, 부모의 학력수준 pearson  $\chi^2=56.26$  Pr=0.000).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4-20> 부모의 경제수준 중요도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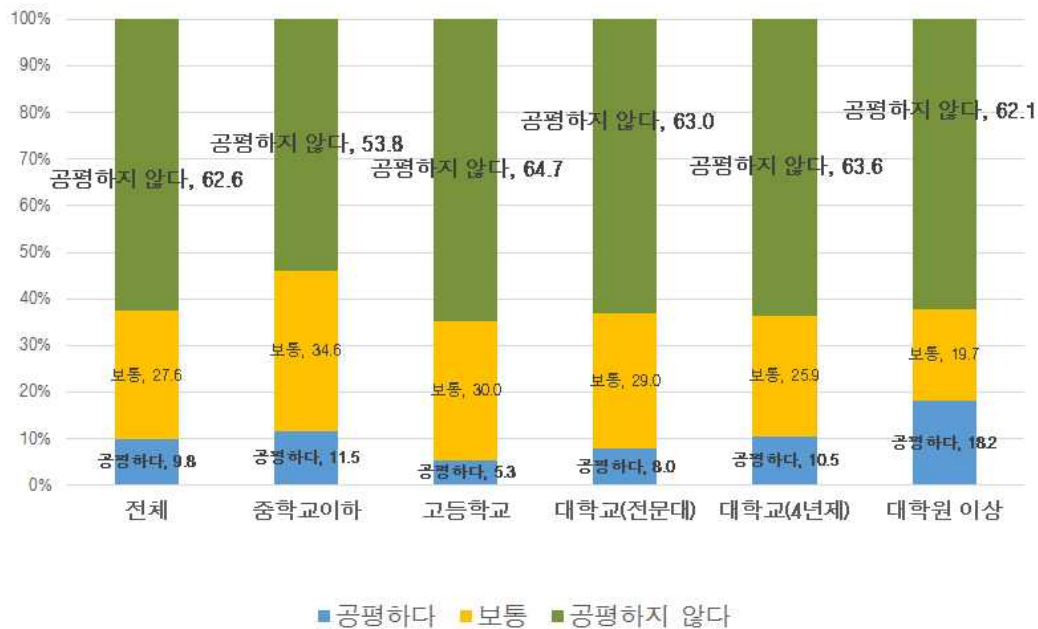
<그림 4-21> 부모의 학력수준 중요도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22>는 한국사회의 기회 보장을 묻는 문항(A3)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 분포도이다(pearson  $\chi^2=23.96$  pr=0.090). <그림 4-20>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하게 한국사회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10.5%,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8.2%가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응답하는 것과 비슷하게 중학교 이하 졸업자의 11.5%가 공평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학교 이하 졸업자 중 한국사회에서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53.8%에 불과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중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기회를 보장받고 싶은 기대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중졸이하 보다 고졸이, 고졸보다 대졸 이상에서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러한 응답결과는 교육비 지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졸이하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경상소득 대비 3.44%, 고졸 가구는 4.97%,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6.21%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며, 예산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이 증가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그림 4-22> 한국사회의 기회 보장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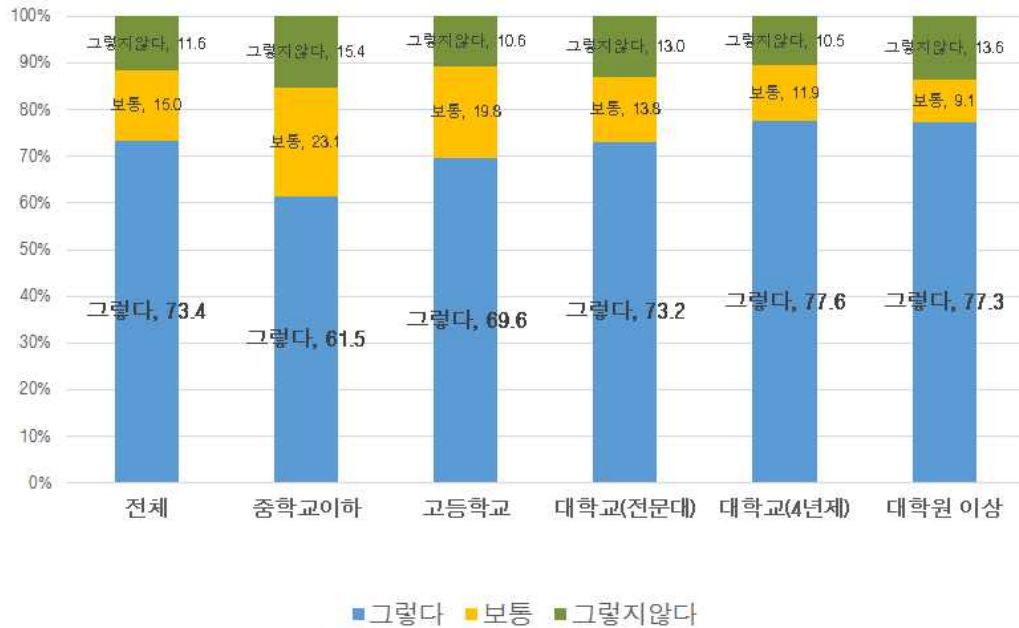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23>은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공교육, 사교육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pearson  $\chi^2=41.88$  pr=0.013). 응답분포를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험이 많을 것이며, 그만큼 교육과정에 사회적 배경이 개입하여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 교육시스템상 특목고, 대학,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등의 교육기회를 선택하는 과정과 이를 위한 사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영향 받는 요소들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이다. 2012년 현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54,575원으로 2003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1분위는 114,275원, 2분위는 182,854원, 3분위는 246,280원, 4분위는 287,443원, 5분위는 415,370원을 지출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그림 4-23>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교육수준별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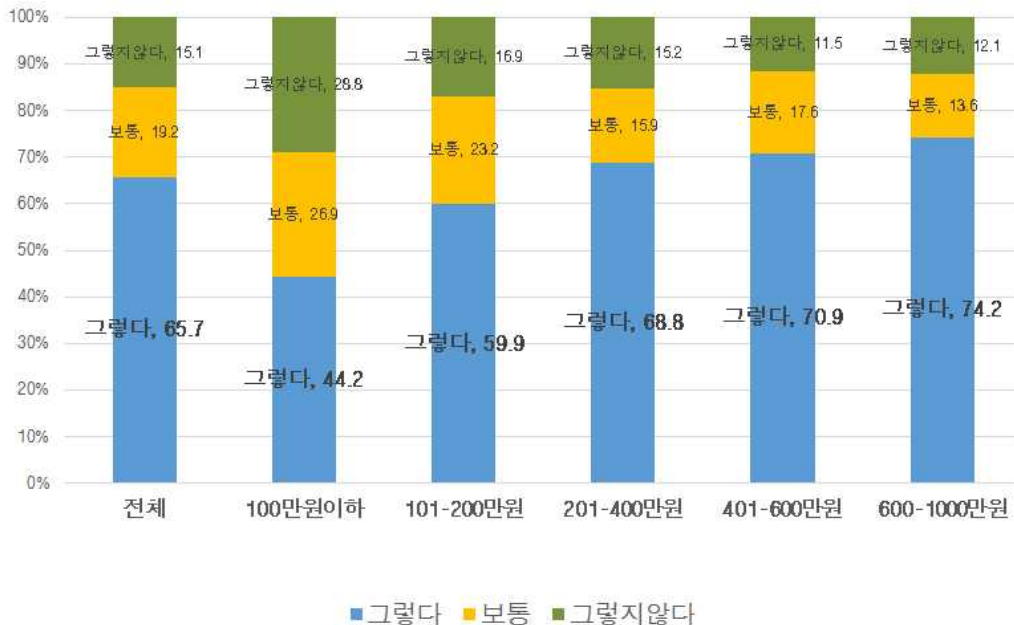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 5)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이 절에서는 소득수준별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다. 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물었고, 이를 총 5분위로 나누었다. 소득하층은 월 100만원 이하, 소득중하층은 101만원-200만원, 소득 중층은 201-400만원, 소득중상층은 401-601만원, 소득 상층은 600-1000만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림-4-24>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의 소득수준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pearson  $\chi^2=49.92$  Pr=0.000). 정확하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공에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100만원 이하에서 성공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4.2%에 불과했으나 101-200만원 소득계층은 59.9%, 201-400만원 소득계층은 68.8%, 401-600만원 소득계층은 70.9%, 600-1,000만원 소득계층은 74.2%가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상위소득계층의 사회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부모의 경제력과 집안배경 등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오 듯”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본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상승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그 중 대다수(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3)</sup>

<그림 4-24>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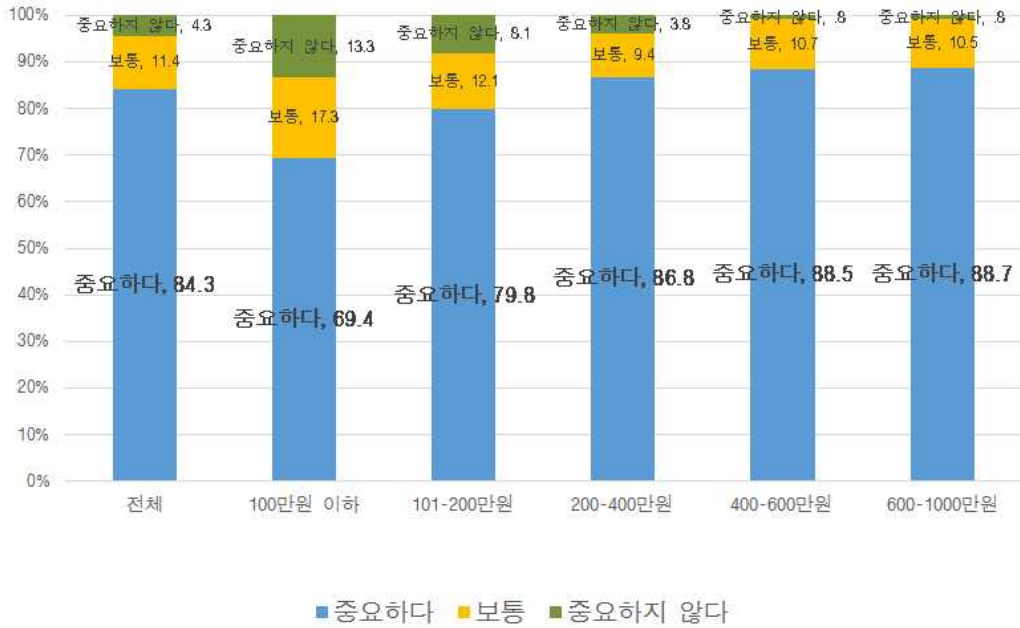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3) 경향신문 2015/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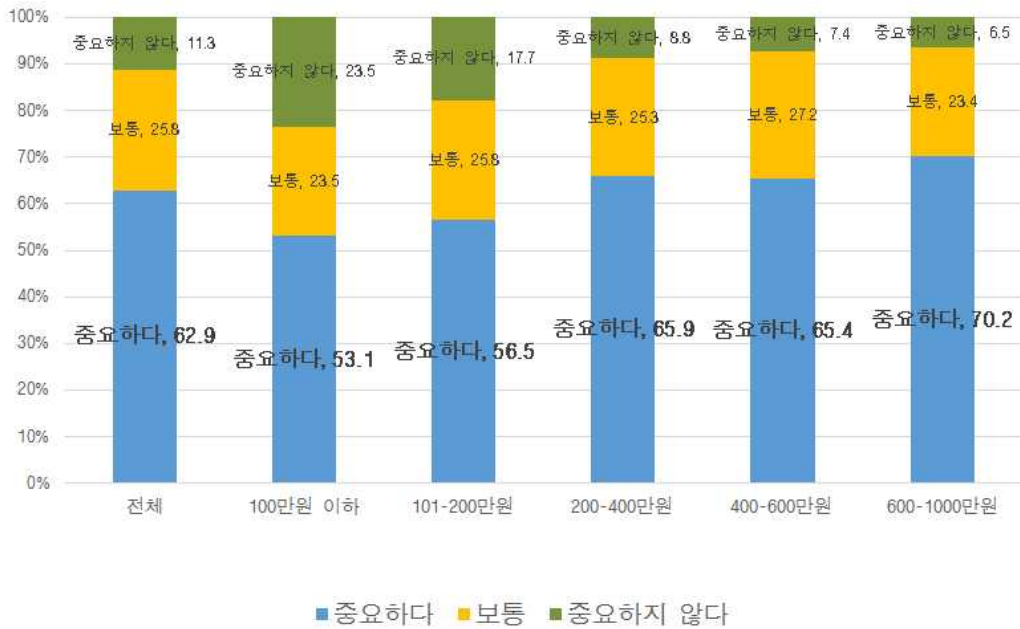


<그림 4-25> 부모의 경제수준 중요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5)

<그림 4-26> 부모의 학력수준 중요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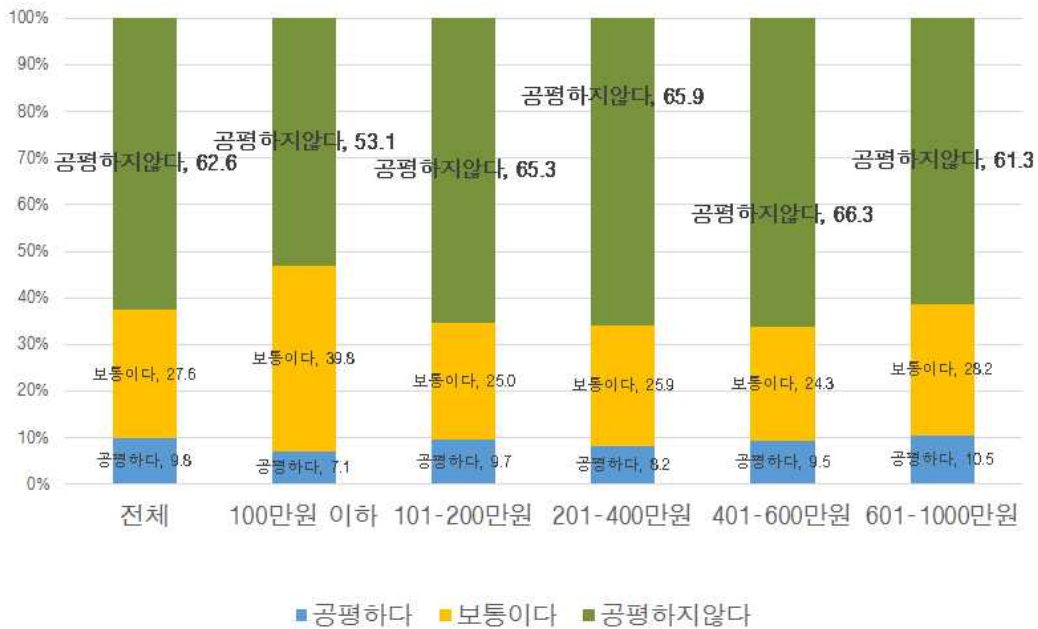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25>와 <그림 4-26>은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응답에 대한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여준다(부모의 경제수준  $\text{pearson } \chi^2=58.19$   $\text{Pr}=0.000$ , 부모의 학력수준  $\text{pearson } \chi^2=37.25$ ,  $\text{Pr}=0.011$ ).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일부임을 감안할 때, <표 4-24>의 결과와 다르지 않게 나왔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림 4-27>은 한국사회의 기회 보장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이다(pearson  $\chi^2=21.25$ . pr=0.396). 소득하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에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과 둘째, 100만원 이하 계층은 오히려 가장 낮은 비율인 53.1%만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본인의 노력 외적인 힘(학벌, 인맥, 집안 등)이 작동하고 있으며, 소득하위계층은 아예 그러한 패턴에 익숙해져서 약 40%가 보통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기회보장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100만원 이하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혜택의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체념 때문이든 복지 때문이든 일부 저소득층의 기회보장에 대한 불공정 응답이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점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27> 한국사회의 기회보장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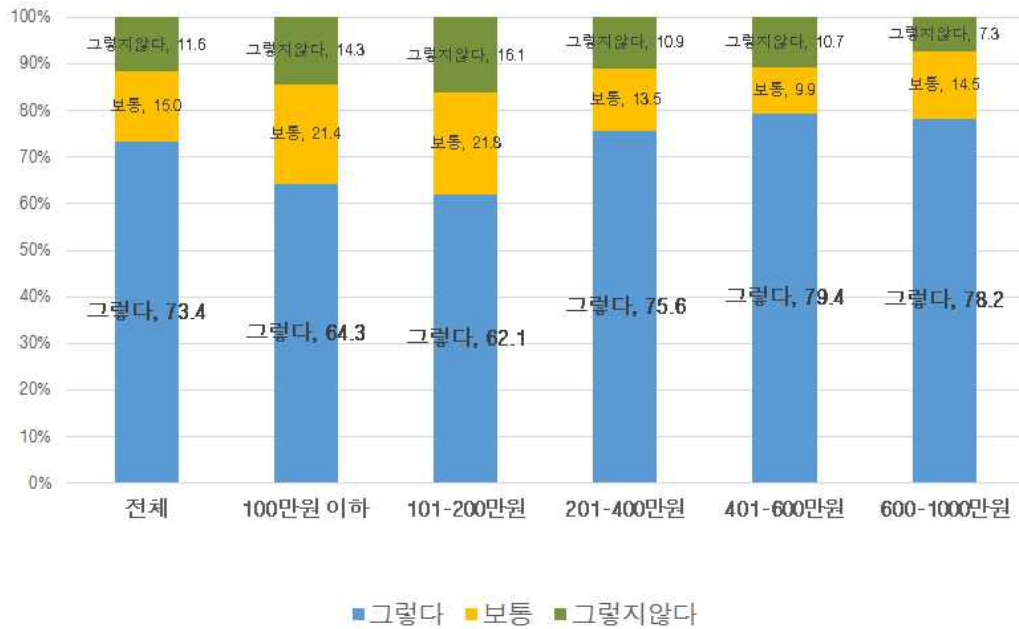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28>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이다(pearson  $\chi^2=43.64$  pr=0.008). 소득중층(중산층)부터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중산층 이상에서부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저소득층은 사교육을 포기하는 확률이 높은 반면 중산층 이

후부터는 거의 모든 세대가 사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체 평균은 8.29%인데, 소득계층별로 1분위는 6.2%, 2분위는 7.7%, 3분위는 8.6%, 4분위는 8.5%, 5분위는 9.2%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만큼 교육비 압박을 받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낮은 사교육비는 의식주 등 필수 소비지출로 인한 예산지출의 결과일 것이며, 따라서 교육기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기회 불평등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8>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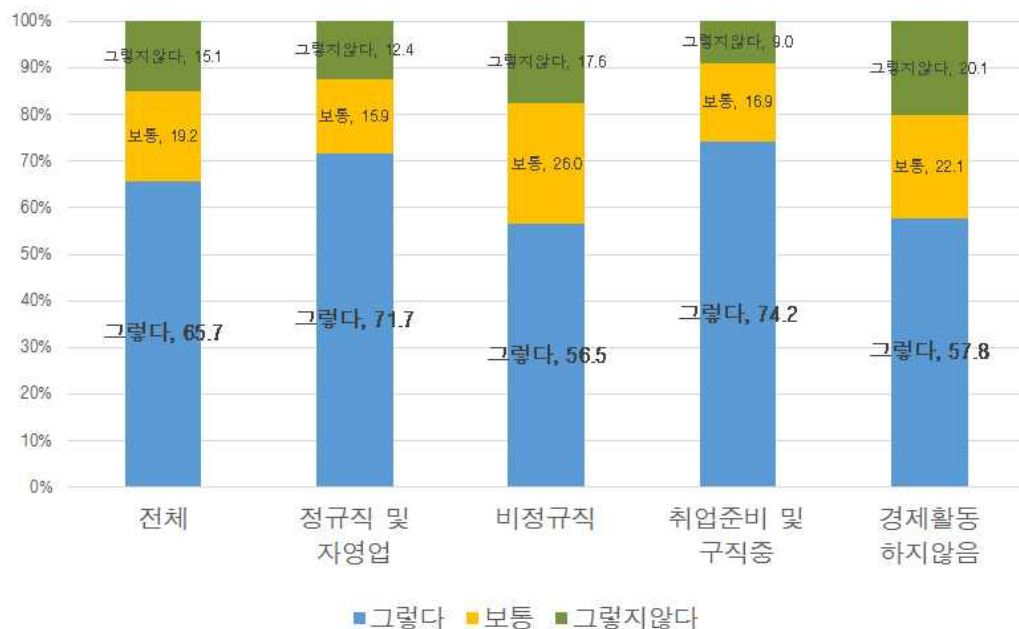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 6)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취업형태별 응답분포

이 절에서는 취업형태별 주관적 인식을 탐색한다. 취업형태는 ①정규직 및 자영업 ② 비정규직 ③ 취업준비 및 구직 중 ④ 경제활동 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림 4-29>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의 취업형태별 응답분포를 보여준다(pearson  $\chi^2=41.90$  Pr=0.000). 비경제활동 인구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노력이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개인의 노력이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과 임금인상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이중 노동시장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이동은 각 시장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질적인 시장 간에는 경직되는 특성이 있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함정이며, 가교로서의 기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남재량.김태기 2000).

<그림 4-29>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에 대한 취업형태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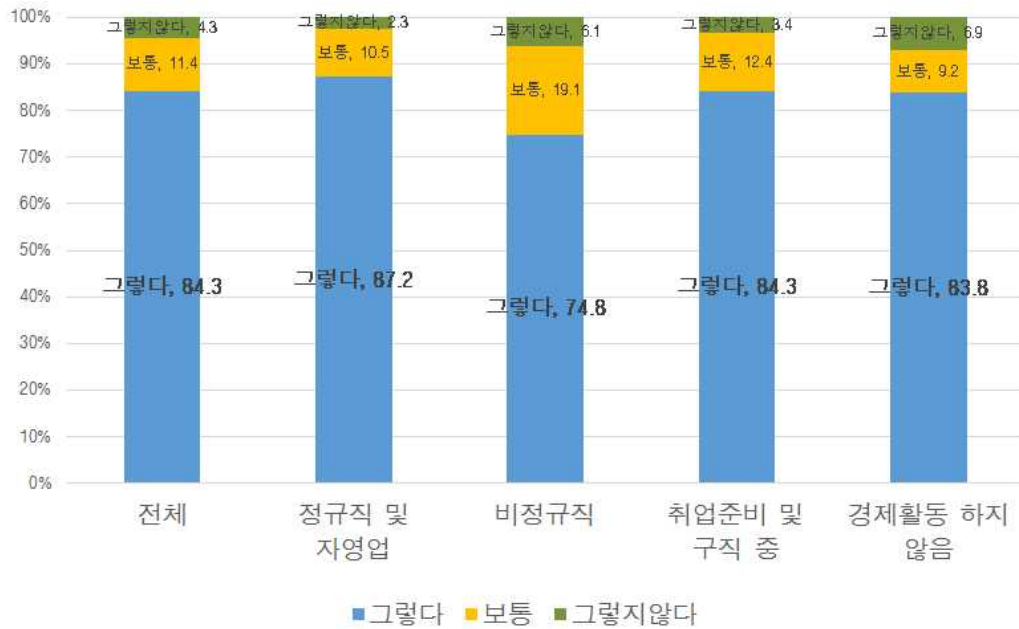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30>과 <그림 4-31>은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에 대한 취업형태별 분포를 보여준다(부모의 경제수준 pearson  $\chi^2=36.42$  Pr=0.000, 부모의 학력수준 pearson  $\chi^2=17.12$ , Pr=0.143).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사회경제적 배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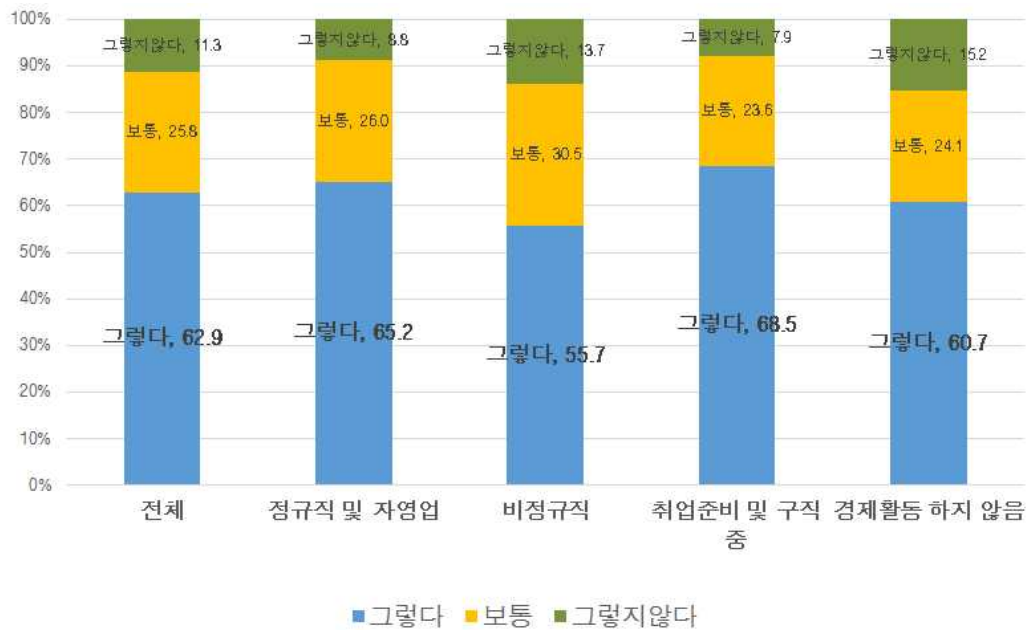
일부임을 감안할 때, <그림 4-29> 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그림 4-30> 부모의 경제수준 중요도에 대한 취업형태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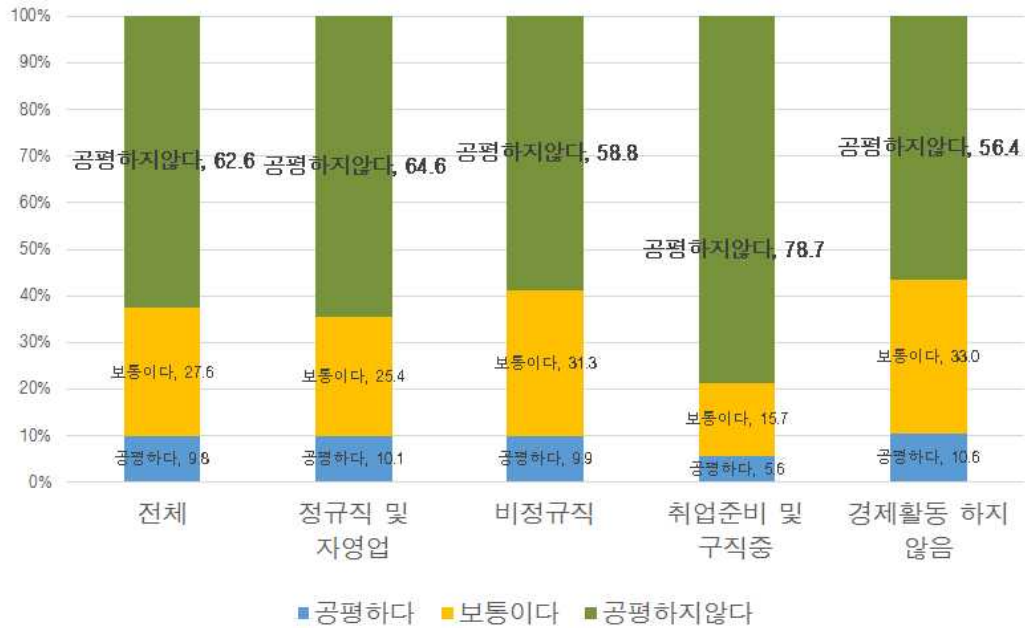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31> 부모의 학력수준 중요도에 대한 취업형태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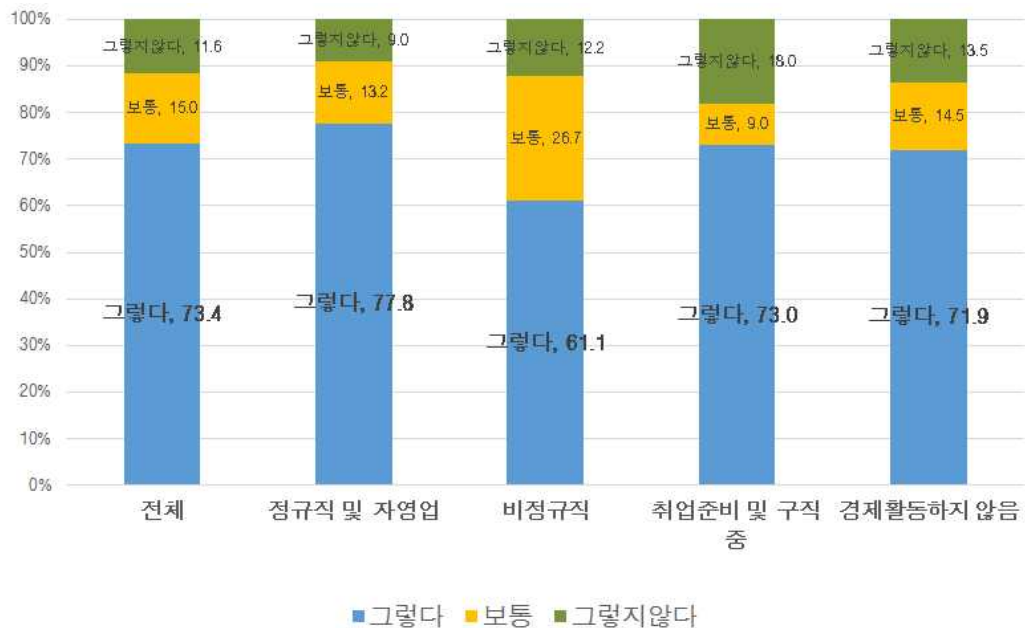
<그림 4-32> 한국사회의 기회보장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32>는 한국사회의 기회보장에 대한 소득수준별 응답분포이다(pearson  $\chi^2=31.24$ ,  $pr=0.002$ ). 여기서도 비정규직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다른 집단들보다 한국사회의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들보다 낮았다.

<그림 4-31>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취업형태별 응답분포



출처 : 동그라미재단,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

<그림 4-32>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취업형태별 응답분포이다(pearson  $\chi^2$  =37.36 pr=0.005). 여기서도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들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해보면, 모든 질문에서 비정규직의 응답태도가 다른 집단들보다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응답태도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정규직 응답자의 소득분포, 연령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 종합분석 :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순서로짓 회귀분석 결과

<표 4-6> 기회균등 인식의 결정요인

	(1)	(2)	(3)	(4)	(5)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	부모 경제수준	부모 학력수준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보장	교육기회의 불평등
성별	0.027 (0.125)	0.056 (0.130)	0.233 (0.128)	-0.009 (0.129)	<b>-0.299*</b> (0.123)
연령	0.037 (0.047)	-0.014 (0.049)	-0.016 (0.049)	<b>-0.198***</b> (0.0502)	0.043 (0.047)
교육수준	<b>-0.262**</b> (0.100)	<b>-0.350**</b> (0.106)	<b>-0.233*</b> (0.105)	-0.066 (0.106)	-0.002 (0.100)
소득수준	-0.054 (0.053)	-0.055 (0.056)	-0.083 (0.055)	-0.027 (0.056)	0.059 (0.053)
경상권	-0.048 (0.194)	0.179 (0.202)	-0.042 (0.198)	-0.133 (0.198)	-0.078 (0.190)
전라권	0.256 (0.239)	0.102 (0.248)	-0.002 (0.244)	0.115 (0.247)	0.210 (0.233)
수도권	0.291 (0.180)	0.112 (0.188)	-0.082 (0.183)	-0.301 (0.185)	-0.073 (0.174)
취업여부 (취업 =1)	-0.264 (0.145)	-0.151 (0.150)	-0.056 (0.148)	0.118 (0.150)	<b>0.309*</b> (0.143)
취업형태 (비정규직 =1 )	<b>0.394*</b> (0.192)	0.394 (0.202)	0.244 (0.197)	-0.185 (0.200)	<b>-0.583**</b> (0.189)
절단값1	<b>-1.637***</b> (0.394)	<b>-1.503***</b> (0.412)	<b>-2.449***</b> (0.413)	<b>-6.133***</b> (0.562)	<b>-3.786***</b> (0.454)
절단값2	0.0643 (0.391)	0.671 (0.410)	-0.287 (0.404)	<b>-3.504***</b> (0.427)	<b>-2.903***</b> (0.416)
절단값3	<b>1.201**</b> (0.393)	<b>2.142***</b> (0.430)	<b>1.276**</b> (0.408)	<b>-1.727***</b> (0.413)	<b>-1.816***</b> (0.396)
절단값4	<b>2.968***</b> (0.428)	<b>3.799***</b> (0.533)	<b>3.087***</b> (0.457)	0.716 (0.411)	<b>-0.785*</b> (0.391)
절단값5					0.128 (0.391)
절단값6					<b>1.684***</b> (0.395)
N	961	961	961	961	961
pseudo $R^2$	0.014	0.014	0.008	0.010	0.006
$\chi^2$	36.89	30.66	20.35	23.98	19.57

주: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함.

이 절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지역과 취업형태가 기회균등의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종합적인 경험적 분석(empirical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



수는 동그라미 재단에서 시행한 5 개의 조사문항의 응답 결과이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된 변수이며, 사회경제적 배경 중요도, 부모 경제수준, 부모 학력수준,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보장은 5점 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순서로짓(ordered logit)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를 추정하고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하였다.

<표4-6>는 기회균등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표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이 사회 경제적 성취를 이루는 데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수준(학력)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경제수준, 그리고 학력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본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공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하고,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한 사람일수록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다른 집단들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육기회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4-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독립변수들(성별, 연령, 소득수준, 지역)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여론조사 및 심층적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을 정확히 포착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자료의 한계상 큰 흐름을 포착해 내기는 어렵지만, 이후 한국사회의 현황과 국제비교 연구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된다면, 우리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IV.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의 현황을 판단해보고 이 차이가 왜 큰 폭으로 나타나는지 추론할 것이다.

### 1. 긍정/부정 답변 비율로 본 기회균등의 주관적 인식

<표 5-1>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sup>4)</sup>

	부유한가정 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높은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인의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의 사회적계층 과 본인의 사회적 계층의 비교
아르헨티나	0.745763	2.693227	19.15217	1.734513
칠레	1.537736	3.719298	23.45455	1.947945
미국	1.645333	6.458647	81.66667	1.229214
호주	1.093333	4.57868	53.95	0.98018
뉴질랜드	0.583643	2.962791	36.04348	1.302703
덴마크	0.631293	1.788372	18.33871	1.16036
핀란드	0.424719	0.746557	11.93878	1.092409
프랑스	0.624625	5.537764	25.07229	0.886661
독일	1.743662	6.268657	96.4	1.798851
이탈리아	3.352941	2.7	19.8718	1.366279
노르웨이	0.850379	1.511568	14.75807	1.230594
스페인	1.588997	5.4	16.3913	1.234637
스웨덴	0.893709	1.959322	27.16129	1.267533
스위스	0.682099	2.645485	35.33333	1.229039
영국	0.692615	3.486773	28.24138	1.355556
중국	6.514535	20.01626	57.75	0.452247
일본	1.16156	1.685121	6.054545	3.287293
한국	4.196911	3.578231	8.282759	1.644401

출처: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이 절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4) 각 변수의 수치는 긍정적인 답변/부정적인 답변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ISSP 2009년 문항 중 네 가지를 추려 긍정/부정 답변 비율을 도출한 결과를 살펴본다. 표 <5-1>은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가정 배경(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높은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과 개인의 노력(본인의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직업의 세대 간 이동성(아버지의 사회적 계층과 본인의 사회적 계층의 비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다(IV장 1. 주관적 인식의 국제비교 참조).

먼저, 경제적 기회균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가정의 배경과 본인노력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자.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가정 배경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첫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자. <표 5-1>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18개국의 긍정/부정 응답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은 18개국 평균(1.609)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4.1969)를 기록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부유한 가정 배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은 이유는 이 두 나라에서 불평등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예외적인 급속한 성장과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의 결합(growth with equity)으로 칭송받았다(World Bank 1993).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축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Feng 2011). 실제로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으며, 중국 또한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두 번째, ‘부모의 높은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긍정/부정 응답비율은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3.578로 나타나 18개국 평균(4.31)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한국인들은 자신의 성공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수준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교육적 성취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본인의 높은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성공하기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들은 전체 18개국 중 긍정/부정 인식의 평균(32.214)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인 8.282에 지나지 않았다. 이 수치는 일본(6.054)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적 성취를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의 통로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직업이동성으로 측정된 계층 상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ISSP 조사 중 ‘현재 직업은 귀하가 15세(중학교 시절)이었을 때 부친이 가졌던 직업과 비교해서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다. 이 질문은 세대 간 직업의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타난 계층상승에 대한 평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은 1.644로 나타나 18개국 평균(1.400)과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이동성으로 가진 사회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직업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은 앞서 가정배경의 중요성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사회에서 경제 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2.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1) 한국의 경제적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

<표 5-2>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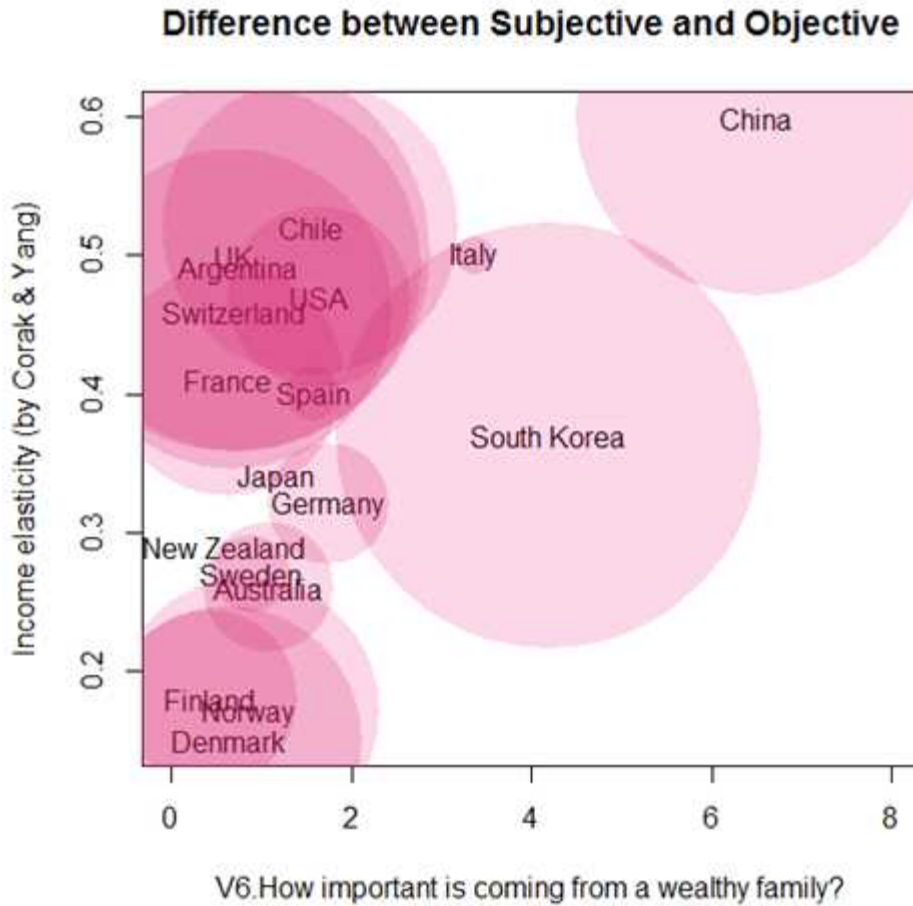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관적 인식)	소득탄력성 (객관적 지표)	주관적 인식 - 조정	객관적 지표 - 조정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의 차이
뉴질랜드	0.5836431	0.29	-0.6508284	-0.6184198	0.03240862
일본	1.1615599	0.34	-0.2840421	-0.2423537	0.04168836
이탈리아	3.3529412	0.5	1.10676165	0.96105784	0.14570381
스페인	1.5889968	0.4	-0.0127608	0.20892562	0.22168637
스웨덴	0.8937093	0.27	-0.4540388	-0.7688463	0.31480751
독일	1.743662	0.32	0.08540059	-0.3927802	0.47818075
호주	1.0933333	0.26	-0.3273434	-0.8440595	0.51671608
핀란드	0.4247191	0.18	-0.7516927	-1.4457653	0.69407253
미국	1.6453333	0.47	0.02299437	0.73541817	0.7124238
프랑스	0.6246246	0.41	-0.6248187	0.28413884	0.90895756
노르웨이	0.8503788	0.17	-0.4815394	-1.5209785	1.03943914
덴마크	0.6312925	0.15	-0.6205868	-1.6714049	1.05081813
칠레	1.5377358	0.52	-0.0452945	1.11148428	1.1567788
스위스	0.6820988	0.46	-0.5883416	0.66020495	1.24854656
중국	6.5145349	0.6	3.11332998	1.71319006	1.40013993
아르헨티나	0.7457627	0.49	-0.547936	0.88584461	1.43378063
영국	0.6926148	0.5	-0.5816674	0.96105784	1.54272526
한국	<b>4.1969112</b>	<b>0.37</b>	1.64240401	-0.0167141	<b>1.65911806</b>

출처: 주관적 인식 :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객관적 지표 : Income elasticity (Corak 2013b, 양정승, 2012).

참고: 주관적 인식-조정, 객관적 지표-조정 변수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를 0을 기준으로 -4~4의 범위를 갖는 변수로 조정.<sup>5)</sup>

<그림 5-1>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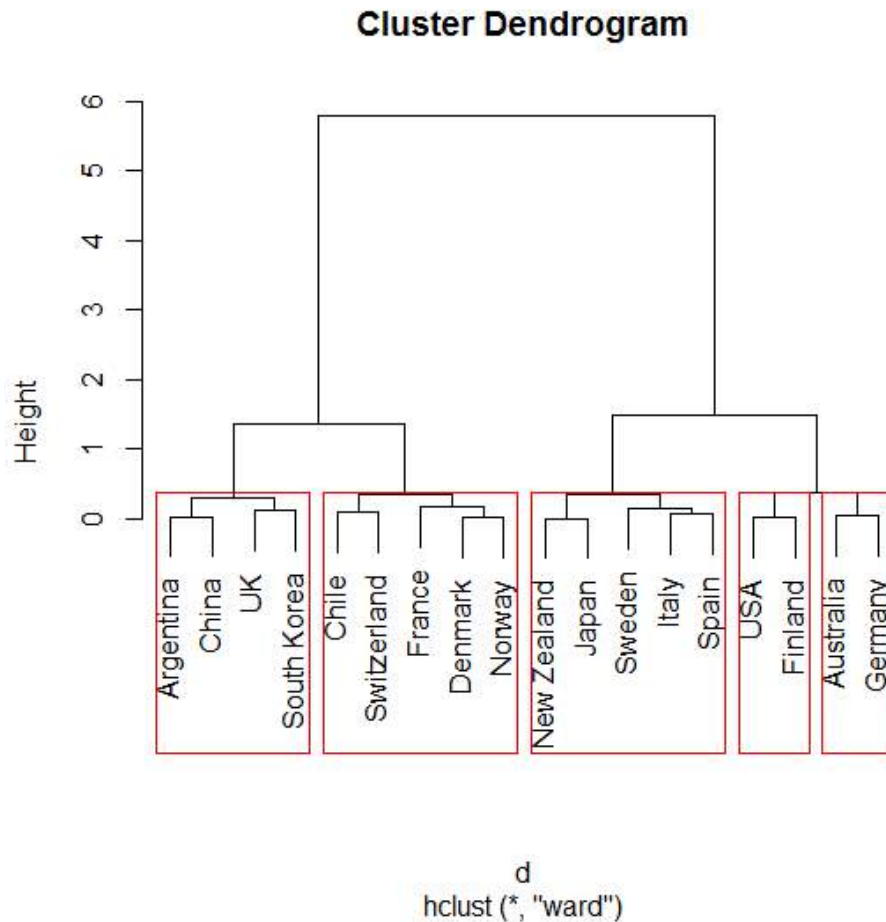
<표 5-2> 는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측정된 객관적 지표(Corak 2013b; 양정승 2012)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5-1>은 Y축에 객관적 지표, X축에 주관적 인식을 그래프로 시각화 한 것이다. 각 국가를 둘러싼 원이 클수록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림에서 잘 드러나듯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격차(1.6591)는 전체 18개국의 격차(0.8109)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였다.

5) 수치가 -4에서 4로 결정된 것은 R 프로그램의 스케일(scale)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된 결과이다. scale 함수는 t값을 구하는 공식과 비슷한데, x-mean/sd의 값으로 구해지는 scale 함수는 절대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퍼져있는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낸다. 모든 수치를 표준화 시켜서 퍼져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4와 4로 조정되었다는 의미는 0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많이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군집분석: 지표와 인식과의 차이는 어떤 국가와 비슷한가?

여기에서는 한국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과의 차이가 국제적으로 어느국가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한국과 유사한 국가군을 판별함으로써 한국 기회균등 수준의 지표와 인식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임을 판별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서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5-3>은 세대 간 소득탄력성으로 측정된 객관적 지표(Corak 2012; 양정승 2012)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묶은 군집분석의 결과이다.

**<그림 5-2> 클러스터 덴드로그램**  
(경제적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지표의 차이)



여기에서 한국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아르헨티나, 중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수준으로 묶여있다. 왜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영국이 한 국가군으로 묶였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국과 나머지 3개국은

실제 세대간 소득탄력성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중요성 인식간의 차이가 매우 큰 나라들이다.

### 3) 왜 한국에서 경제적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큰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으로 측정된 경제적 기회균등의 객관적 지표와 개인의 성공에 미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측정된 주관적 인식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한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료의 미비로 엄밀한 경험분석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원인 변수를 탐색해 보자.

본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간의 차이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 사회가 기회의 균등에 있어서 비동시적인 경험들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비동시성의 동시성,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구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불평등한 구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두루 알듯이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열려있는 사회였다. 2015년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계층인 베이비 붐 세대(1955-63년 출생자 또는 1955-1974년 출생자)는 이와 같은 계층상승을 몸소 경험한 세대였다. 아버지 세대들에 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룬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은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비해서 현실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베이비 부머들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세대이다. 이로 인해서 계층상승과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즉 베이비 부머의 시각에서 볼 때 경제 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계층 상승의 경험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식 세대인 에코세대(1979년-92년 출생) 또한 할아버지 세대에 대비되는 아버지 세대의 성취를 경험하고 성장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이 세대야말로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왔던 노령세대 또한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해서 많은 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세대이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성취에 대비되는 에코세대의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는 세대이며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가능성이 큰 세대이다.<sup>6)</sup>

6) 최근 한 조사(사회통합 위원회, 2012)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바 있다. 세대 간 갈등이 클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대가 등록금, 집값, 청년 실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인

실제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구조는 불평등한 구조로 빠르게 변모하였다. 이로 인해서 한국사회는 기회 균등 구조에 대한 비동시적인 경험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기회 균등 구조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다른 세대의 경험이 비추어, 자신 세대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악화된 현재의 기회 균등 구조를 실제보다 훨씬 불평등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연구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노동시장의 이중적인 구조와 불평등, 제도적인 요인과 시민들의 신뢰, 그리고 평등주의적인 문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 ①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와 구조화된 불평등

일차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와 구조화된 불평등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이 열악할수록 (자신의) 노동을 통한 사회적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고 해당 국가의 시민들은 객관적인 지표(세대 간 소득 탄력성)가 나타내는 것보다 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러한 차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한 자산 불평등(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주택소유는 부와 계층상승의 상징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은 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주택소유의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산에 대한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객관적인 조건(세대 간 소득 탄력성)보다 개인의 성공에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 새로운 계급으로서 비정규직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확산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직종 간 차이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급으로 부상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은 임금 불평등이 매우 높고 최저임금 또는 이하를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확대된 비정규직은 2014년 현재 정부의 통계로 보더라도 6백만이 넘어서 전체 18백만여 임금 노동자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4).<sup>7)</sup>

비정규직 규모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직종 간 이동성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

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수렴적 현상을 매개하는 단위는 가족이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은 문제는 20대와 같은 청년 세대의 문제이지만 30-40대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들은 여전히 등록금 상환의 이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40대는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0-60대의 경우도 결혼 못한 자녀, 취직 못한 자녀, 혹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한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사회통합위원회 2012, 52).

7) 김유선(2014)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44.7%에 달하는 823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대기업 정규직이 100원을 벌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0.7원을 버는데 그쳤다.<sup>8)</sup> OECD의 비정규직 이동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2013)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11.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3년 뒤에도 단지 22.4%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과반수가 넘는 50.9%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일하고 있지 않은 비율도 26.7%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16개 국가의 평균 1년 후 35.7% 정규직 전환률과 3년 후 전환률 53.8%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한국은 비정규직 탈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된 것이다.<sup>9)</sup>

### 높은 임금불평등과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구조화되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또한 악화되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의 임금불평등(임금 10분위 배율 d9/d1)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노동통계(2013)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불평등(2011년)은 4.85로서 OECD 평균 3.37을 훨씬 웃돌았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미국(5.03)과 이스라엘(4.91)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OECD 고용전망 보고서(2015)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국 중에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5.5%였다. 한국은 그 비율이 14.7%로서 (2013년 기준)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시간제 노동자가 발달한 일본의 비율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즉 한국은 노동 시장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자산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의 양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다.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자산 불평등이 부상한 것이다. 자산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면, 단순한 소득을 넘어서 주택, 부동산, 금융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원의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과 결합되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남상호(2015)에 따르면 2014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바탕을 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인데 반하여 순자산 지니계수는 0.6514로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적으로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주택(아파트)을 둘러싼 경쟁과 주거의 불평등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한 연구는 연간 흑자액 기준의 주택구매력 지수(주택가격/연간 흑자액, 가계의 저축 가능한 돈으로 주택구입까지 걸리는 시간)를 제시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3분위에 속하는 계층이 주택가격 3분위에

8) 연합뉴스 2015/08/08.

9) 한겨레 2014/10/06.

속하는 주택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27.1년이였다. 이를 수도권으로 좁혀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소득 3분위에 속하는 계층이 같은 종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년이고 서울의 경우 54년이다.<sup>10)</sup>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는 노동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감안할 때 부모의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속하고 있다.<sup>11)</sup> 자산 불평등에 의해서 나타난 주거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사회의 기회 균등의 구조와 인식의 차이를 확대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캐거루족과 니트족의 증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구나 소득 불평등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대졸 후에도 부모에 의지하는 캐거루족과 구직을 단념한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캐거루족이나 니트족이 되는데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사는 캐거루족과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이 늘어날수록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에 따르면 대졸자 51.1%가 캐거루족으로 나타났다. 캐거루족의 구성을 보면 47.6%가 정규직 취업자, 34.6%는 비취업자, 14.7%는 임시직 취업자, 3.1%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캐거루 족 중에서 자신이 바라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비율은 19.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수치는 심각한 취업난과 일자리 질의 악화가 캐거루 족 증가의 중요한 원인임을 암시한다.

또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중에서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니트족의 비중은 OECD 평균인 8.2%보다 훨씬 높은 15.6%로 나타나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24.9%)와 멕시코(18.5%) 뿐이었다.<sup>12)</sup> 최근 한 연구(현대경제연구원 2015)에 따르면 한국의 니트족의 특성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42%가 취업경험이 부재한 상태였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니트 족이 42.9%를 차지하였다. 미취업 기간 동안 니트족의 56.2%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 ② 제도적 요인과 시민들의 신뢰수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요

10) 새사연, 오마이뉴스 2013/08/29.

11) 주택산업연구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하우스 푸어는 약 248만가구로 추정되며 2012년에 비해서 약 17만 가구가 증가하였다(주택산업연구원 2012).

12) 연합뉴스 2015/08/05.

인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수준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면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과 관련제도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높은 사회적 갈등 수준**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중요한 사회 갈등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인종적 갈등의 수준이 매우 낮은 동질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갈등의 수준은 OECD 국가의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갈등관리의 능력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경제위기 이후 확장된 복지지출의 정책적 효능은 여전히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관련제도의 정책적 능력의 취약성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정부 신뢰와 투표참여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 **사회적 갈등의 수준과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15)에 따르면 민족 문화 갈등을 제외한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396(2011년 기준)로서 OECD 국가 중에서 4위에 달했다. 단지 칠레, 이스라엘, 터키만이 한국보다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사회적 갈등 관리 지수(0.380)가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서 27위로 나타나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갈등관리지수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 규제질, 부패통제 능력, 정부소비 지출 비중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기준 21위(표준화 지표 0.53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사회적 갈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0.923), 스웨덴(0.866), 핀란드(0.859)등으로 나타났다. 일본(0.569)과 미국(0.546)도 순위가 각각 18위와 20위로 나타나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 **낮은 복지지출과 미미한 복지제도의 빈곤개선 효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복지 지출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51%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이다. 한국의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평균은 0.284). 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49로 OECD 평균 세후 빈곤

율(0.108) 보다 높았다. 즉 한국은 세금이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나라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니 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2010년 기준)도 0.03에 그쳐서 칠레에 이어서 최하위권을 차지하였다 (OECD 2013, 한겨레 2014/08/07). 즉 한국은 노동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미비한 나라인 것이다.

### **낮은 투표율과 낮은 정부신뢰**

한국의 낮은 투표율과 낮은 정부 신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정치참여의 특징적인 현상은 민주화 이후 급속하게 낮아진 투표율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그다지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투표율 하락의 속도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한국의 평균 투표율은 50%이하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하여 OECD 자료(2012)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는 25%로 나타나 조사대상 41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29위에 머물렀다. 즉 한국 국민 10명중 단지 2.5명만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4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인 터키(56%), 멕시코 (37%), 칠레(33%)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 **③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 영향일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한국의 강한 평등주의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평등주의적 문화**

아직 비교 가능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비교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로 평등주의를 들 수 있다(김문조 외 2013; 복거일 2008; 송호근 2006). 한국의 평등주의는 한국인의 문화적인 특성중의 하나인 집단주의와 현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개인적 차이보다는 일치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특성과 현세의 성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향이 평등주의를 강화했다. 역사적으로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그리고 민주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의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자유의 기반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 통치는 평등주의를 종종 정치적으로 동원했다.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유지했던 한국에서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문화는 준거집단과 자신의 속한 집단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계층상승의 욕구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의 평등주의 문화는 권위주의와의 유착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에 대한 인정거부나 존경의 철회로 나타난다 (송호근 2006). 평등주의가 강할 경우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의 성공을 그들의 업적의 결과로 인정하기 보다는 연줄이나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폄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

에서 평등주의는 한국사회의 기회구조를 확대해석 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3.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의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 1) 한국의 교육의 기회균등 지표와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표 5-3> 교육기회 격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18개국 비교

	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주관적 인식)	부자만이 대학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	PISA 점수 (객관적 지표)
아르헨티나	0.646729	0.498282	0.305333
칠레	0.987805	0.953737	0.292333
미국	0.312088	0.407745	0.2805
호주	0.371555	0.657343	0.172
뉴질랜드	0.150456	0.22877	0.262
덴마크	0.135885	0.094545	0.232333
핀란드	0.180328	0.096	0.197667
프랑스	1.302661	2.130117	0.328333
독일	0.582677	0.705584	0.357
이탈리아	0.33274	0.292639	0.197
노르웨이	0.120968	0.052632	0.228667
스페인	0.382353	0.300932	0.246667
스웨덴	0.162295	0.142857	0.249333
스위스	0.866667	0.277778	0.305667
영국	0.587963	0.602837	0.269
중국	1.591837	1.6974	0.165667
일본	0.277372	0.687375	0.199333
한국	<b>1.761194</b>	<b>2.100703</b>	0.198667

출처: 주관적 인식 :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In <country> only students from the best secondary schools have a good chance to obtain a university education'

-In <country>, only the rich can afford the costs of attending university.

객관적 지표 : OECD PISA(2012) 언어, 수학, 과학 평균의 standard deviation

표 <5-3>은 중등교육의 수준(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와 경제적 지위(부자만이 대학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가 대학교육의 성취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18개국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학교육 이수에 미치는 중등학교 수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성취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대학 교육의 성취에 미치는 중, 고등학교 수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수치(부정적인 대답에 비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이 긍정적인 인식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1.7611). 이 수치를 전체 18개국 평균(0.5974)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2014년 기준 70.09%, 통계청)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단지 부자만이 대학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대학 교육비와 경제적 지위와의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18개국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2.100)은 프랑스(2.130)와 함께 가장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은 18개국 평균(0.6626)에 비해서 3배가 넘었다. 이 결과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한국인들이 경제적 지위가 교육의 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격차에 대한 위의 분석을 고려할 때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의 격차에 경제적 격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5-4>는 중고등학교의 수준이 대학교육의 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실제 교육적 성취간의 차이에 대한 18개국 비교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중등학교 수준의 중요성과 실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차이(1.7611)는 18개국 평균(0.5974)보다 세 배정도 큰 수치로 중국(1.5918)과 함께 최상위권(1위)을 형성하였다. 그림<5-2>는 Y축에 객관적 지표, X축에 주관적 인식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각 국가를 둘러싼 원이 클수록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 수치는 한국이 과열입시경쟁과 과중한 사교육 방지를 목적으로 1974년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대학입시에서 나타난 대학진학 격차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도시 내 거주지간 대학 진학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김영철 2012).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부상한 특수 목적고(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열풍이 중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12~14년 서울 시내 12개 주요 대학에 입학한 일반고 졸업생 비율은 72.9%에서 58.8%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사고 졸업생 비율은 14.1%를 기록하였다. 서울대의 경우도 2014년 입시에서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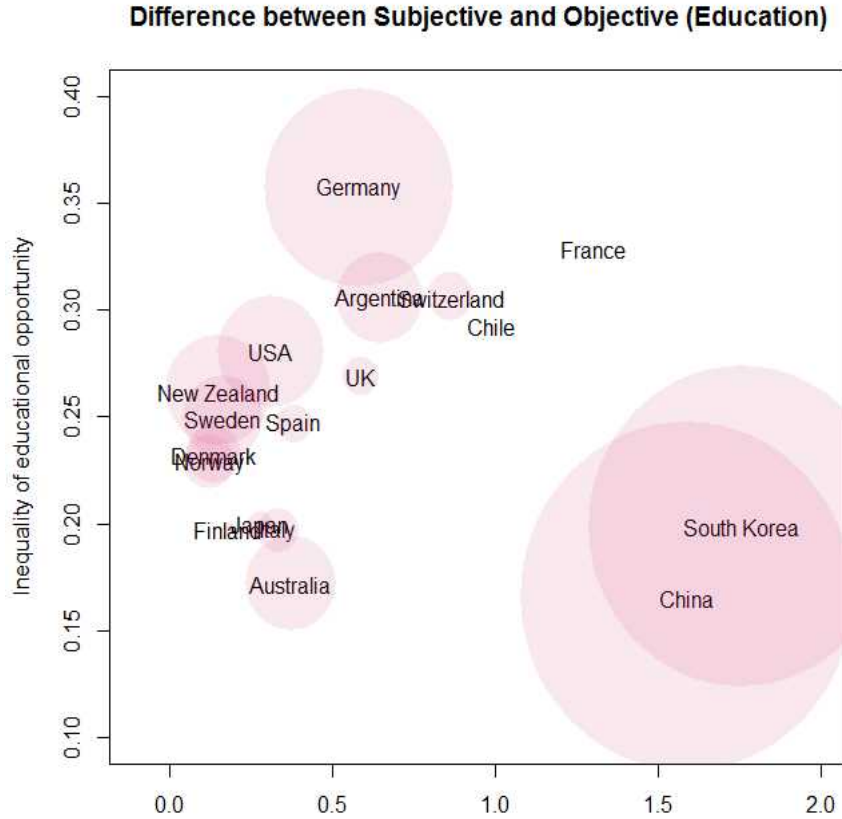
고 출신 비율은 절반에 못미친 46.7%에 머물렀고 자사고 비율은 20.3%에 달했다(연합뉴스, 2014/10/13). 즉 지역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력격차와 서열화가 확대되면서 중등학교의 수준이 대학진학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실제보다)확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4> 주관적 인식과 교육적 성취(PISA)간의 차이 - 18개국 비교  
(좋은 중고등학교 출신만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있다)

	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주관적 인식)	PISA 점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인식 - 조정	객관적 지표 -조정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의 차이
칠레	0.9878049	0.2923333	0.76539016	0.78032104	0.01493089
프랑스	1.3026608	0.3283333	1.38269889	1.43319133	0.05049244
핀란드	0.1803279	0.1976667	-0.81775518	-0.936486	0.11873083
일본	0.2773723	0.1993333	-0.62748923	-0.90626054	0.27877131
스페인	0.3823529	0.2466667	-0.42166334	-0.047857	0.37380634
영국	0.587963	0.269	-0.01854283	0.35716438	0.37570721
이탈리아	0.3327402	0.197	-0.51893442	-0.9485762	0.42964178
스위스	0.8666667	0.3056667	0.52788569	1.02212486	0.49423917
노르웨이	0.1209677	0.2286667	-0.93413707	-0.37429214	0.55984493
덴마크	0.1358852	0.2323333	-0.90488986	-0.30779611	0.59709375
스웨덴	0.1622951	0.2493333	-0.85311039	0.00050375	0.85361414
아르헨티나	0.646729	0.3053333	0.09667424	1.01607976	0.91940552
호주	0.3715546	0.172	-0.4428347	-1.40195834	0.95912365
뉴질랜드	0.1504559	0.262	-0.87632232	0.23021738	1.1065397
USA	0.3120879	0.2805	-0.55942547	0.56572017	1.12514564
미국	0.5826772	0.357	-0.0289062	1.95306953	1.98197573
한국	<b>1.761194</b>	0.1986667	2.28170259	-0.91835072	<b>3.2000533</b>
중국	<b>1.5918367</b>	0.1656667	1.94965943	-1.51681515	<b>3.46647458</b>

출처: 주관적 인식 :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In <country> only students from the best secondary schools have a good chance to obtain a university education.  
객관적 지표 : OECD PISA(2012) 언어, 수학, 과학 평균의 standard deviation

<그림 5-3>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좋은 중고등학교 출신만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있다)



V18. only students from the best secondary schools have a good chance to obtain a university

<표 5-5>는 경제적 격차가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육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차이의 18개 국가 간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인식 사이에 가장 차이가 큰 나라는 한국이었다. 한국의 객관적 성취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갭(3.1031)은 18개국 평균(1.087)보다 세배 정도 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18개 국가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한국 인들은 (교육적인 성취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실제 교육격차 보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에 이어서 중국도 비슷한 격차를 나타냈다(3.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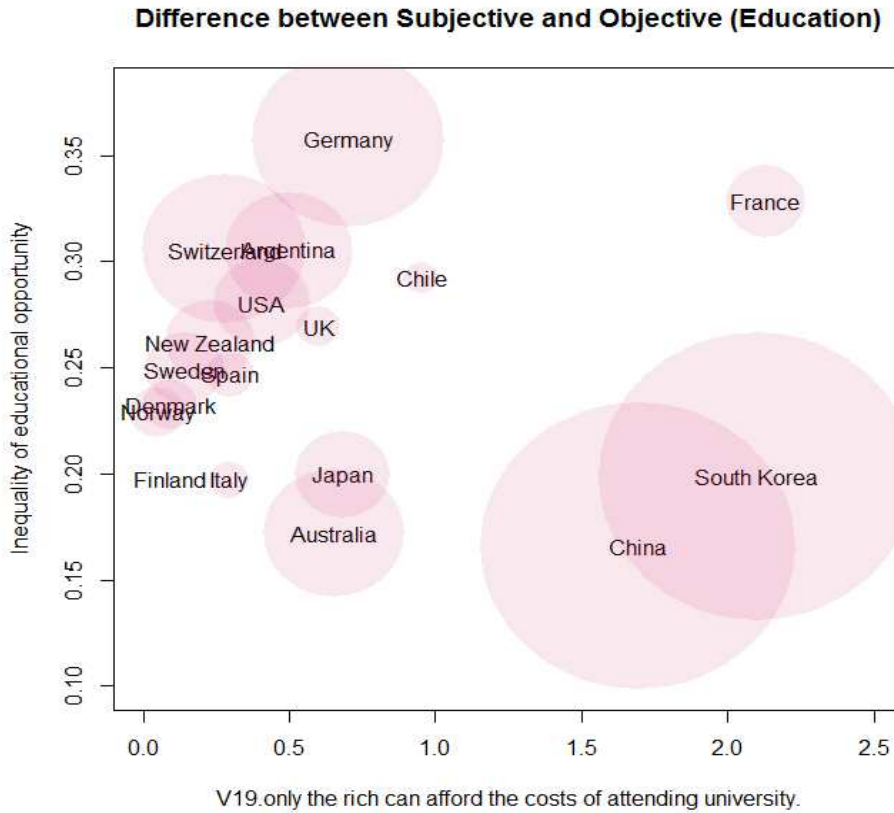


**<표 5-5> 주관적 인식과 교육적 성취와의 차이-18개국 비교**  
(부자만이 대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부자만이 대학교육에 필요한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주관적 인식)	PISA 점수 (객관적 지표)	주관적 인식 - 조정	객관적 지표 -조정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지표의 차이
핀란드	0.096	0.1976667	-0.86085192	-0.936486	0.07563408
칠레	0.95373665	0.2923333	0.442271969	0.780321042	0.33804907
이탈리아	0.29263914	0.197	-0.5621062	-0.9485762	0.38647
영국	0.60283688	0.269	-0.09083557	0.357164379	0.44799995
스페인	0.30093209	0.2466667	-0.54950706	-0.047857	0.50165006
노르웨이	0.05263158	0.2286667	-0.92673977	-0.37429214	0.55244763
덴마크	0.09454545	0.2323333	-0.86306175	-0.30779611	0.55526564
스웨덴	0.14285714	0.2493333	-0.7896638	0.000503752	0.79016755
프랑스	2.13011696	0.3283333	2.229498001	1.433191331	0.79630667
뉴질랜드	0.2287695	0.262	-0.6591407	0.230217378	0.88935808
일본	0.68737475	0.1993333	0.037599323	-0.90626054	0.94385986
미국	0.40774487	0.2805	-0.3872308	0.565720166	0.95295097
아르헨티나	0.49828179	0.3053333	-0.24968181	1.016079757	1.26576157
호주	0.65734266	0.172	-0.0080272	-1.40195834	1.39393115
스위스	0.27777778	0.3056667	-0.58468445	1.022124865	1.60680931
독일	0.70558376	0.357	0.065263515	1.95306953	1.88780602
중국	1.69739953	0.1656667	1.57208827	-1.51681515	3.08890342
한국	<b>2.10070258</b>	<b>0.1986667</b>	2.184809943	-0.91835072	<b>3.10316066</b>

출처: 주관적 인식 : ISSP social inequality IV(2009),  
-In <country>, only the rich can afford the costs of attending university.  
객관적 지표 : OECD PISA(2012) 언어, 수학, 과학 평균의 standard deviation

<그림 5-4>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  
(부자만이 대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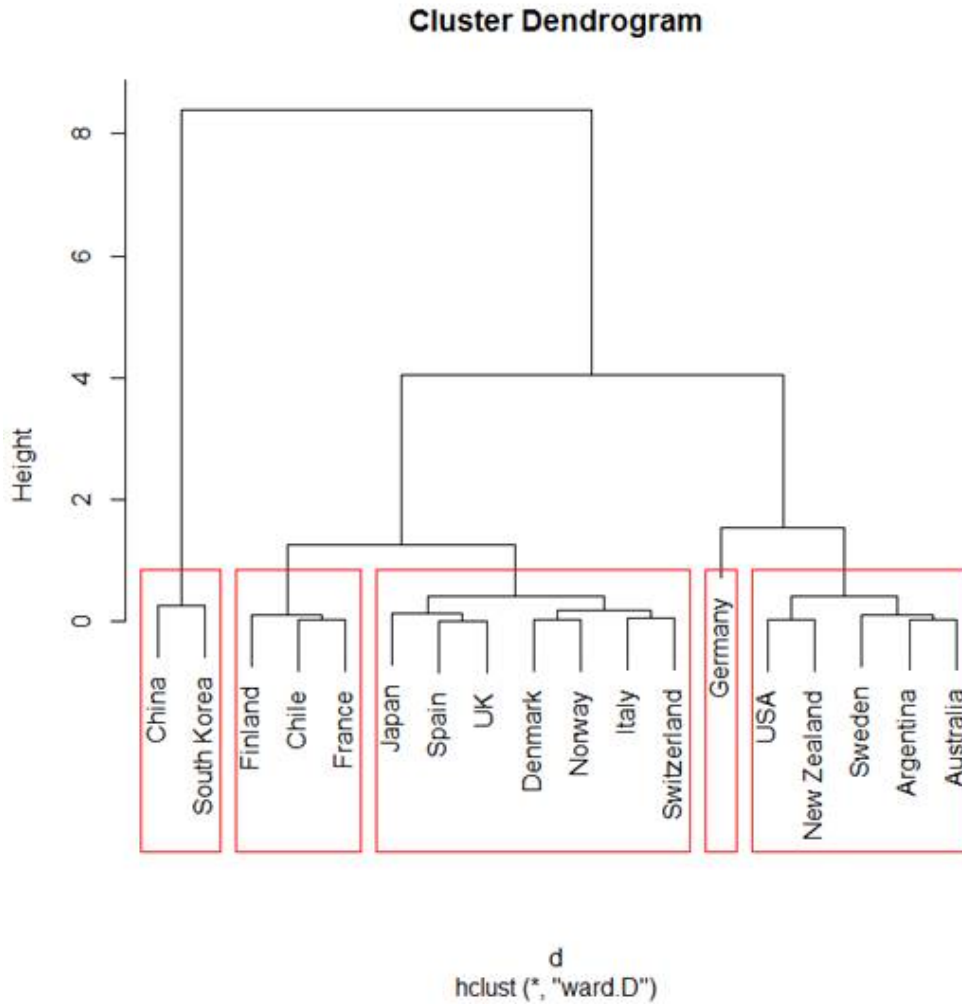


2) 군집분석 : 지표와 인식과의 차이는 어떤 국가와 비슷한가?

여기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PISA 점수의 평균의 표준편차)와 주관적 인식(좋은 중고교 출신이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과의 차이가 국제적으로 어느 국가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그림 5-5> 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과의 차이가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묶은 군집분석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과 중국의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다른 16개국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여기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은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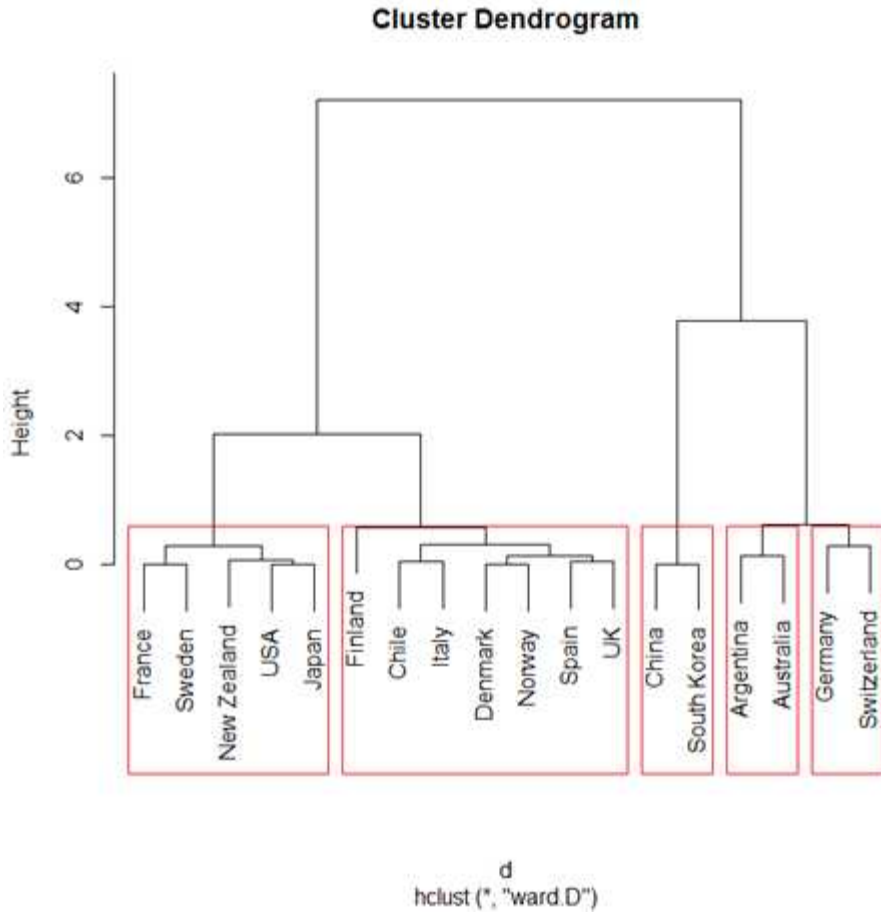
13) 세로축의 Height가 클 수록 다른 국가군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5> 클러스터 덴드로그램  
 (좋은 중고등학교 출신만이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있다)



<그림 5-6>은 ‘부자만이 대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를 주관적 인식의 변수로 설정한 결과(<그림 5-4>)의 클러스터 덴드로그램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한국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중국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으로 묶여진 국가군과 다른 국가군과의 차이는 <그림5-5>의 덴드로그램보다는 크지 않지만(Height 4), 한국과 중국이 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클러스터 덴드로그램  
 (부자만이 대학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 3) 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지표와 인식간의 차이가 한국에서 제일 큰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한국은 조사 대상 18개국 중에서 교육성취로 측정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 사이에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은 교육적 성취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교육 격차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교육격차에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간의 차이가 큰 데에는 높은 교육적 열망에 대비되는 교육의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 먼저,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다. 특히 아래에서 제시한 것처럼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성취에는 몇 가지 계기가 존재하였다. 1980년 국가보위위원회에 의해서 실시된 ‘졸업정원제’ 이후 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늘었다. 또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대학 개혁 조치와 함께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 (1996)로 인해서 대학설립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 대학의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서 대학 진학이 훨씬 용이해졌다. 이 결과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 33.2%에 지나지 않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에 달했다(시사인 386호, 2015/02/02). 둘째,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대학들은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대학의 서열화는 단지 신입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도 관련이 깊다.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셋째, 경제위기 이후 이중화된 노동시장구조와 악화된 임금 불평 속에서 대학 졸업자의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은 과거에 비해서 대폭 약화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대졸자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는 상위 10% 대학 졸업자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의 대학졸업자의 경우 성별과 경력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고졸자의 평균 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집단의 교육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수확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졸자 대비 취업률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요컨대,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 구조 또한 양극화 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확은 과거에 비해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 시장의 이중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시민들은 더 이상 기대만큼 가능하지 않은 교육의 계층상승 역할에 기대어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몰입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가 승자독식의 구조로서 패자 부활이 대단히 어려운 사회라는 점이다. 하지만 더 좋은 대학의 입학에 대한 사교육의 몰입은 더 이상 기대했던 보상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한국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불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 ① 높은 대학 등록금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OECD 자료(2009)에 의하면 한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DP 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윤관호 채지윤 김동관 2012).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GNI)이 2007년에 처음 2만 불대에 진입한 2014년까지 2만 불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대학 등록금은 경제적 격차가 대학교육을 성취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 ② 높은 대학 등록금 상승률

2005-2009년 사이 전국 4년제 40개 국공립대학과 156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46.3%, 사립대학은 30.5%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15.8%)의 2.9배와 1.9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가계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 소득)의 21.7% 증가율에 비해서 국립대는 2.1배 사립대는 1.4배나 빠른 증가속도를 나타냈다.<sup>14)</sup> 객관적인 지표보다 큰 주관적인 인식에는 대학 등록금의 수준과 함께 가계소득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상승한 등록금의 상승률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을 넘어서 빠르게 상승한 등록금으로 인해서 대학 교육 감당하는데 경제적 격차가 미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 ③ 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 지원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민감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는 7.6%로서 OECD 평균인 6.1%보다 높았다. 즉,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교육의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4.9%로 OECD 평균(5.3%)보다 낮다. 이에 반해서 민간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나타나 OECD 평균(0.9%)에 비해 세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초등교육과 고등 교육으로 나누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초 중등교육의 민간 부담율(0.8%)은 OECD 평균(0.3%)의 두 배 정도이지만 고등교육에서 민간 부담율(1.9%)은 OECD 평균(0.5%)의 두 배가 높은 네 배에 달

14) 세계일보 2009/12/10.

했다(OECD 2014).<sup>15)</sup> 학생 일인당 공교육비(미국 달러의 구매력 지수 기준)는 OECD 국가 평균은 13,958였지만 한국은 9,927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 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은 41에 달했지만 한국은 34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인 지원은 결국 교육에 대한 사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교육에 대한 사적인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적 격차가 대학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④ 사교육 과열과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좁은 취업문에 대비되는 높은 학력은 한국이 과잉학력의 사회라는 것을 나타낸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학력, 지역,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큰 사회이다. 이러한 구조는 좀 더 나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 경쟁의 과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열풍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의 경쟁구조가 악화된 불평등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사교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으로 기능하지만 한국은 높은 점수를 얻어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보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1995년과 2003년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초수준 미달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17.8%에서 29.2%로 증가한 반면에 수월수준 이상의 참여율은 59%에서 83.7%로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기초수준 미달자의 참여율(69.9%, 2003년)이 수월 수준<sup>16)</sup>이상자의 참여율(17.9%)를 압도하는 현상과는 정반대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소득 수준의 최하층(100만 원 이하)은 3분의 1에 못 미치는 32.1%만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지출액도 한 달에 6.6만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최상층 (700만 원 이상)은 최하층의 2.5배에 해당하는 83.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지출액도 최하층에 7배에 가까운 42.8만원을 지출하고 있다(통계청 2015).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사교육 시장에서 실제 계층 간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학입학을 위해서 과열된 사교육 시장과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은 대학교육에 미치는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⑤ 교육적 성취에 대비되는 취업률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가진 사회이다. 이러한 교육열은 높은 교육적 성취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청년층(25~34세)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66%)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줄곧 1위를 차지했

15) 연합뉴스 2014/09/09.

16) 새사연 2013/09/30, <http://sisun.tistory.com/1327>

다(OECD 2014, 교육부 2014). 높은 교육열과 교육적 성취에 반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OECD의 평균에 못 미쳤다. 구체적으로 2009년~12년 사이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률은 83%대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취업률은 77%내외였다 (OECD, 통계청). 특히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한 네덜란드(92%)는 물론이고 멕시코(78%)나 터키(77%) 칠레(76%)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OECD 2011).<sup>17)</sup> 한국 사회의 교육 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에 대비되는 낮은 취업률은 서열화된 대학 구조 속에서 더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중화된 노동 시장 구조 속에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 전통적으로 계층상승의 통로로 작용했던 교육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7) 중앙일보, 2014/03/05.



## VI.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기회의 균등 구조의 객관적인 위치와 기회의 균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그리고 객관적 위치와 주관적 인식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난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장은 본 보고서의 발견의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장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중의 하나는 한국 사회는 한국사회의 기회균등 구조의 객관적 위치에 비해서 (부정적인) 주관적 인식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즉 객관적인 위치와 주관적인 인식 간에 차이가 매우 큰 나라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사회의 기회 균등 구조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균등 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대에서 가장 높았다(72.2%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몇몇 조사에서 확인 된 바 있다. 퓨리서치 조사(2014)<sup>18)</sup>에 따르면 한국이 미래에 대한 낙관의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한국 사회가 패자 부활 가능성이 없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청년 열 명 중의 일곱은 한국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 없는 사회로 인식했다(77.3%가 다시 올라 설수 없다고 답변).<sup>19)</sup>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청년들이 느끼는 기회 균등 구조의 공정성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패자 부활 지수는 부모가 중상층 이상인 청년의 경우 37.7점인데 반해서 하층은 그 절반이하인 17.2점에 지나지 않았다. 공정성 지수도 중상층 이상의 경우 26.4점인데 반해서 하층은 18.6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 5 장에서 제시된 교육 기회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이러한 지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대학의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 완전 무상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정치권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또는 전문대학 무상교육이 우선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일직종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직종에서 고용의 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18)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2/25/south-koreas-millennials-downbeat-about-payoff-of-education-future/>

19) 한겨레 2015/08/18.

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의지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층별로 분화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한국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보이는 나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중등교육의 수준이 대학 교육 이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학교의 서열화가 (중)고등학교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열화의 영향을 (실제보다)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제 5 장에서 이러한 격차의 가능한 원인으로 불평등한 구조속의 높은 사교육비, 교육에 대한 낮은 공적 지원, 그리고 높은 교육적 성취에 대비되는 낮은 취업률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발견의 정책적 함의는 먼저 한국인들이 낮은 보상(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서열화된 대학 구조속에서 보다 높은 순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나친 과열경쟁과 필요이상의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취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사교육을 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중에 8명에 달했고 이들이 예상하는 사교육비용은 32만원에 달했다<sup>20)</sup>.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서열화 된 교육구조에서 기인한다. 서열화된 교육구조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서열을 평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교 공동학위제와 같은 제도를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교양대학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학입시는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고 수험생들은 대학 자격고사와 내신만으로 대학에 들어간다. 이후에 교양대학에서 필수과정을 이수한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민교협 2015). 현재 고교평준화의 보완을 명목으로 등장한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학 입시를 위한 명문고로 전략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서열화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쟁 구조속에서 대학입시를 위한 특별한 경로를 유지하면서 고교 평준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목고과 자사고를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특성화된 교육을 일반고에서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제 4 장은 동그라미 재단에서 수행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15)에 기반을 두어 주관적 인식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흥미로운 중요한 발견들이 제시되었다. 한국 사회의 기회 보장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청년세대(20대)였다. 전 세대 평균(62.6%)을 훨씬 상회하는 72.1%의 청년세대가 한국 사회의 기회보장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기회균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종합분석에서

---

20) 조선일보, 2012/07/01

행해진 순서로짓 분석을 통해서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기회구조가 불공평한 구체적인 요인을 묻는 답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성취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성공에 중요하다는 인식(문항 A1)-4) 가장 높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연령집단은 40대(73.5%)와 50대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도 40대(경제수준, 88.6%, 교육수준 72.5%)와 50대(경제수준 89.4%, 교육 수준 71.2%)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1955-63)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80년대 한국사회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베이비 붐 세대는 조기퇴직, 퇴직 후 준비가 안된 노후 등 열악한 조건속에서 이혼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sup>21)</sup> 베이비 붐 세대가 성공에 개인의 노력보다는 가정 배경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는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삶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연령 집단인 3~40대, 나아가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1992)에 전승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 일자리 공유, 부분별한 해고 억제,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자식세대인 에코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교육격차와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처방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회균등 구조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학력이 성공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의 성공에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낮게 인식한 계층은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제적 하층이었다(제 4 장 참고).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경제적 하층이 한국사회의 기회 균등 구조를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하지 않는다.<sup>22)</sup>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감안할 때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경제적 하층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높은 교육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관련하여 제 4 장의 분석은 학력이 낮은 계층에 비해서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21) 보건사회연구원(2013)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3.5명으로 OECD 평균(12.8명)을 훨씬 상회하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살(11.8%)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7.1%는 지난 일년동안 적어도 한번은 ‘자살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52.8%)이었다(통계청 2010).

22) 실제로 최하층의 3분의 2 이상(69.4%)가 부모의 경제수준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과반수가 넘었다(53.1%). 또한 최하층 중에서 한국의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3분의 2에 가까운 64.3%였으며 한국사회의 기회 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도 과반수가 넘었다(53.1%)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이 개인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한국 사회의 기회보장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비슷했다(62%~64.7%). 이 두 흥미로운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과 교육 수준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sup>23)</sup> 요컨대, 경제적으로 하층은 교육적 성취가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이중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는 계층은 한국사회의 불균등한 기회 구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하층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다면 하층의 열악한 교육적 투자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불평등한 사·공교육 시장을 감안할 때, 하층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심해지면 경제적 하층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일탈로 이어진다.<sup>24)</sup>

이러한 추론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하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앞서 제시한 바대로 노동과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불평등 구조와 개선과 교육의 공공지원일 확대가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 실제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소득과 교육 수준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correlation 0.295, pr=0.000).

24) 대검찰청의 이른바 물지마 범죄 분석(대검찰청 보도자료 2013/06/21)에 따르면 범행자의 대부분(87%)이 무직(63%) 또는 일용노동(24%)에 종사하는 사람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제적 빈곤층이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현실 불만 및 자포자기가 범죄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 Ⅶ. 참고문헌

### <국내

#### 문헌>

- 강성진·이우진. 2009.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신욱·임완섭. 2006. 『사회보장정책에서 기회의 균등원칙 적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문희. 2015. “금융위기 이후 청년 니트족의 도전 과제와 관련 정책.” 『THE HRD REVIEW』 18(3)
- 김민성, 김봉근, 하태욱. 2009. “한국의 세대간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 『국제경제연구』, 15(2): 87-102.
- 김영철. 2012.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포커스. 통권 23호.
- 김우철·이우진. 2008.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소득 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우철·이우진. 2009. “Roemer의 기회평등개념과 한국의 소득세 정책” . 『경제분석』. 15(3): 129-168.
- 김유경. 201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제152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선. 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진욱. 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와 요인분석”, 서울사회경제연구소(편).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여강출판사.
- 김희삼. 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김희삼. 2015.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54:1-8.
- 남상호. 2015.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제2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재량, 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 (bridge) 인가 함정 (trap) 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81-106.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15. 『입시 사교육 없는 대학체제』 서울: 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2013-16
- 복거일. 2008. “평등과 한국의 평등주의.” 『시대정신』 여름호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2013. “저축만으로 집사는 데 27년”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2013. “사교육비 세계1위”

- 송호근. 2006. 『한국의 평등주의-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 신광영. 2012.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서울: 살림.
- 신정완. 2014.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 복지.
- 양정승. 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추정”, 『노동경제논집』, 35(2):79-115.
- 윤관호. 채지윤 김동관. 2012. “한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과 미국 및 OECD국가와의 비교.” 『경영교육 저널』 통권 23권.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이우진, 고제이. 2011.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재정학연구』. 4(2):47-87.
- 이우진. 2012. “경제민주화와 기회의 평등”. 『한국경제포럼』. 5(3): 5-25.
- 이정우, 이성림. 2001.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7(1).
- 이정우. 2010. 『불평등의 경제학』. 서울: 후마니타스.
- 이주호·정혁·홍성창. 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국가인가”, KDI Focus. 통권 제46호.
- 정영호. 고숙자. 2014. 『사회갈등 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호. 2001.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 주택산업연구원, 2012.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분석』.
- 이준구. 1994.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서울:다산출판사.
- 최지은, 홍기석. 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143-163.
- 최홍석. 2013. “국민의 공공적 삶 만족도 측정 연구” 『지방행정연구』. 27(2): 189-212.
- 한국개발연구원. 2014. 『KDI 경제전망』, 31권 1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5. 『현안과 과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15-29호.

#### <신문기사>

- 경향신문
- 세계일보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한겨레

<영문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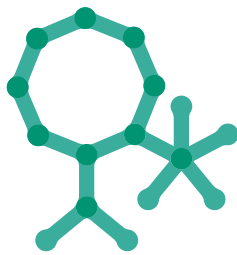
- Arneron, R. J. 1989. "Equality of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 Bedard, K., and C. Ferrall. 2003. "Wage and Test Score Dispersion: Some International Evidenc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2(1): 31-43.
- Bentham, J. 1996.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Burns, J. H. & Hart, H. L. A(ed). Oxford : Clarendon Press.
- Blau, F. D., and L. M. Kahn. 2005. "Do Cognitive Test Scores Explain Higher US Wage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1):184-193.
- Bowles, S. and H. Gintis. 1996. "Efficient Redistribution: New Rules for Market, States and Communities," *Politics and Society*. 24.
- Brown-Iannuzzi et al. 2015. "Subjective Status Shapes Political Pre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26:15-26.
- Brunori, P., F. H. G. Ferreira, and V. Peragine. 2013. "Inequality of Opportunity,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Mobility: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IZA Discussion Paper No. 7155.
- Chatty, R., N. Hendren, P. Kline, and E. Saez,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Equality of Opportunity Project, Havard University.
- Cecchi, D., and V. Peragine. 2010.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Italy."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8(4): 429-450.
- Cecchi, D., V. Peragine, and L. Serlenga. 2010. "Fair and Unfair Income Inequalities in Europe" . ECINEQ Working Paper 174.
- Cohen, G. A. 1986. "Self-Ownership, World-Ownership and Equality," G. A. Cohen ed.(1995)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Cambridge Univ. Press,
- Cohen, G. A. 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 Cohen, G. A. 1990. "*Equality of What? On Welfare, Goods and Capabilities*," Recherches de Louvain. 56.
- Corak, M. 2006. "Do Poor Children Become Poor Adults?: Lessons from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ZA Discussion Paper No. 1993.
- Corak, M. 2013a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 27(3): 79-102.
- Corak, M. 2013b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in R. Rycroft ed, *The Economics of Inequality, Poverty and Discrimination in the 21<sup>st</sup> Century*. 107-125, Santa Barbara: ABC-CLIO
- Dworkin, R. 1981a. "What is Equality? Part 1: Equality of Welfar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185-246.
- Dworkin, R. 1981b. "What is Equality? Part 2: Equality of Resourc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283-345.
- Dworkin, R. 2000. *Sovereign Virtue*. 염수균 옮김.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 Easterlin, Richard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Winter), 3-10.
- Feng Wang. 2011. "The End of 'Growth with Equity'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East Asia" *Asian Pacific Issue* No. 101, East-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 Ferreira, F. H. G. and J. Gignoux. 2011.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Latin Americ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7(4): 622-657.
- Ferreira, F. H. G. and J. Gignoux. 2014. "The Measurement of Educational Inequality: Achievement and Opportunity."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8(2): 210-246.
- Ferreira, F. H. G., C. Lakner, M. A. Lugo, and B. Özler, 2013,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8243.
- Fleurbaey, M., and V. Peragine. 2013. "Ex-ante Versus Ex-post Equality of Opportunity." *Economica*. 80(317): 118-130
- Gerhard, G. and B. Ravikumar. 1992. "Publics vs. Priva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ndogenous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4).
- Kelley Nathan and Peter Enns. 2010. "Inequality and the Dynamics of Public Opinion: The Self-Reinforcing Link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Mass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4(4):855-870.
- Kenworthy Lane and Macall Leslie. 2008. "Inequality, Public Opinion and Redistribution" *Socio-economic Review* 6(1)
- Krueger, A. 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Presentation made to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January 12th. 2012.



- Lefranc, A., C. Pistoiesi and A. Trannoy. 2008. "Inequality of Opportunities vs. Inequality of Outcomes: Are Western Societies All Alik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4(4): 513-546.
- Lilla, Mark, R. Dworkin, R. Silvers (eds). 2001. *The legacy of Isaiah Berlin*. 서유경 옮김. 2006 『이사야 벌린의 지적유산』. 동아시아.
- Lucas, R., J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3-42.
- Lucas, R., Jr. 1995. *Responsibility*. Oxford, UK: Clarendon Press.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 OECD, 2010. *Economic Policy Reform. Going for Growth*.
- OECD. 2012a. 2014a. *Society at a Glance*.
- OECD. 2012b, *PISA 2012 Results and Focus, What 15-year-olds know and what they can do with what they know*.
- OECD. 2014b. *Education at a Glance*.
- OECD. 2015. *Government at a Glance*.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1971(1999). 황경식 역. 2002. 『정의론』. 이학사.
- Roemer, J. 1985. "Equality of Talents," *Economics and Philosophy*. 1.
- Roemer, J. 1993. "A Pragmatic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the Egalitarian Planner,"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2.
- Roemer, J. 1996.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 Press.
- Roemer, J.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 Press.
- Roemer, J. 2002. "Equality of Opportunity: A Progress Report." *Social Choice Welfare*. 19: 455-471.
- Roemer, J. et al. 2003. "To What Extent Do Fiscal Regimes Equalize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Citize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539-565.
- Sen, A. K., 1979. "Utilitarianism and Welfarism," *Journal of Philosophy*. 76.
- Sen, A. K., 1982.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Blackwell.
- Sen, A. K.,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박순성, 강신욱(역). 1999.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
- Sen, A. K., 1992. *Inequality Reexamined*. 이상호, 이덕재(역). 1999.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
- Singh, A. 2011.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arnings and Consumption Expenditure: The Case of Indian Me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 (1):79-106.
- Thomas, V., Y. Wang, and X. Fan. 2001. "Measuring Education Inequality: Gini

- Coefficients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525. The World Bank. .
- Van de Gaer, D. 1993.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Katholieke University Press.
- Veenhoven Rutt.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33-46.
- World Bank, 1993, *East Asian Miracle—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World Bank. 2006.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Equ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 2008.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Volume 1: Main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도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135-7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나래빌딩 3층

Tel 02.3470.3600 Fax 02.3470.3601

[www.thecircle.or.kr](http://www.thecircle.or.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9 772465 777001  
ISSN 2465-7778